

2023 SPRING

열린충남



100호 특집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
반짝반짝 빛나는 생활속 아이디어 모여라!

권두언

시장지향 농정으로 성장하는 충남 농업과 농촌 경제

특집

충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몇가지 제안
충청남도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충남 농촌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육성 전략

현안연구

치명적 가뭄에 대비한 지하물 이용방안 모색
지방시대의 핵심전략, 로컬 창조 활동과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방향

#권두언	04	시장지향 농정으로 성장하는 충남 농업과 농촌 경제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충남 쉼농위원회 위원)
#특집	06	<p>01. 충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안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이도경 충남연구원 연구원</p> <p>02. 충청남도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p>03. 충남 농촌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육성 전략 유학열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p>
#현안연구	27	<p>01. 치명적 가뭄에 대비한 지하물 이용방안 모색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영일 충남연구원 전임선임연구위원 이 샘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p> <p>02. 지방시대의 핵심전략, 로컬 창조 활동과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방향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위원</p>
#열린마당	38	태안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과 영화 '태안' 강희권 태안참여자치 시민연대 대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 상임이사)
#100호 특집	42	<p>01.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 심대평 전.충남도지사</p> <p>02. 반짝반짝 빛나는 생활 속 아이디어 모여라! -충남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정봉희 충남연구원 출판홍보팀장 김소연 충남연구원 출판홍보팀 행정원</p>
#언론이 바라본 충남	51	MZ세대 청년농업인 정착의 조건 이찬선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 부국장
#인권 A to Z	5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그리고 충남연구원의 과제 명형남·김형철·강마야·최윤정 충남연구원 인권센터
#연구원 소식	60	

스마트폰으로도
[열린충남]을
만나보세요



2023 SPRING Vol.100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인** 유동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오용준 **편집위원** 권미정, 김진영, 백운성, 여형범, 조봉운 **에디터** 정봉희, 김소연, 송수진
주소 우)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홍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www.cni.re.kr **편집제작** 천안인쇄주식회사
문의사항은 ssj2397@cni.re.kr로 연락바랍니다.

김태연

시장지향 농정으로 성장하는 충남 농업과 농촌 경제



2020년을 전후하여 전 세계가 미증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갑작스럽게 전 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한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이 시작되면서 우리 일상 생활의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4차 산업 혁명의 기술과 결합되면서 실제로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와 사회구조도 변화시켰다. 그리고 현재 나타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도 역시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런 시대적 혼란기에 2022년 7월 충남에서는 민선 8기가 출범하였다. 새로운 시대 상황을 맞이하여 새롭게 대응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농업과 농촌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김태흠 지사는 선거공약으로 “농업·농촌과 4차 산업을 결합시켜 돈 되는 농어업을 육성”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공동체 중심의 포괄적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던 지난 민선 7기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적 성장 중심의 농업·농촌 발전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농촌소멸, 고령화, 저출산, 농업노동력 부족 등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일자리 부족, 사업체의 부족, 지역 업체 간의 순환적 연계의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기본소득처럼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경제 내에서 그 돈이 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비로 다 써버리는 소득이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역경제에서 실현되어야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농업과 농촌 부문에서도 이러한 투자-생산-소비의 순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소위, 시장지향적인 농정이다.



김태연 | 단국대학교 교수
(충남 쉼농위원회 위원)

시장지향적인 농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농업과 농촌에 시장경제를 형성해야 한다. 먼저, 지역 외부와 연계되는 시장경제를 형성해야 한다. 생산된 농산물의 궁극적인 소비처를 지역 외부로 설정하는 경제활동을 창출해야 한다. 즉, 대량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대도시 지역에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 내 기업에서 가공하거나 포장해서 외부에 판매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 농산물 가공 업체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에 농가의 농업 생산성 증대에 투자해야 한다. 비농업 기업 활동을 먼저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활동을 확대하는 순서를 준수해야 한다. 소비처를 확보하지 않고 증가된 농산물은 가격 하락과 보관 및 처리 비용의 증대를 수반하기 때문에 농가 경제에는 거의 재앙적 수준의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농산물을 원료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나타나 시장경제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 내부 주체들 간의 연계로 시장경제를 형성해야 한다. 소위, “로컬푸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들은 로컬푸드를 단지 지역 농산물을 지역 주민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해하는데, 로컬푸드는 이런 직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시장경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호 이익을 보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소규모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지역 내 사업체를 연계하여 이들이 지역 소비자나 방문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거나 새로 설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당, 호텔, 민박, 농산물 가공업, 체험, 교육, 유통, 수공예품 제작 등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발굴하여 농가와 연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시장경제 형성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선 각 활동이 전개되는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즉, 가치사슬(Value Chain)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과 사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활동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마지막 유의사항은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재정보조를 하지 않는 것이다. 투자금을 알선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특정 업체에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경제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대신, 업체들이 자신의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농업·농촌 분야에서 시장경제를 창출하는 것은 다른 일반 산업에서 추진하는 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농업과 농촌을 예외적이고 보호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것은 구시대의 관점이다. 농어민과 농기업도 어엿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일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 집



충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충청남도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충남 농촌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육성 전략

충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안¹⁾

강마야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이도경 | 충남연구원 연구원

충남의 청년농업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해있다. 민선 8기 충남도정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가 ‘청년농업인’ 정책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량적 결과는 암담하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취업자는 전체의 51.9%, 광·제조업 취업자는 47.9%인데 반해 농림어업 취업자는 3.8%로서 산업별 직군 대비 취업자 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에 해당하는 농업인구인 30대 이하는 38,830명(전체의 14.5%), 40대 이상은 227,679명(85.5%)을 차지한다. 이 중 농업경영주만 추출하면, 전국 12,426명 중 충남은 1,259명(전체의 10.1%)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청년 정책, 청년농업인 정책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많은 정책과 사업이 실행되는데 왜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청년층 인구는 계속 유출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떤 청년이 대답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의 청년들은 사실 농업과 농촌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라고... 어쩌면 우리는 그 질문과 그 대답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지도 모른다. 청년농업인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 글은 충남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생활 실태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지역과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안코자 한다.

충남의 청년농업인 정책 및 생활실태

첫째, 충청남도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청년농업인과 관련한 정책 현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고).

2022년 본예산 기준에 따르면, 농림축산분야 예산 총 1.45조 원 중 청년농업인(청년창업농, 후계농, 4-H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31개 사업, 66.8억 원을 투자(약

1) 강마야, 이도경(2022)의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전략과제연구, 충남연구원, 근간)”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재구성함(저자 주).

4.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관련 시행부서는 충청남도청 2개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2개국이다. 이들 사업을 단계별·영역별로 분류하였더니 유입 및 성장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은 22개, 7.8억 원(11.8%)을, 정착 및 자립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은 9개, 58.9억 원(88.2%)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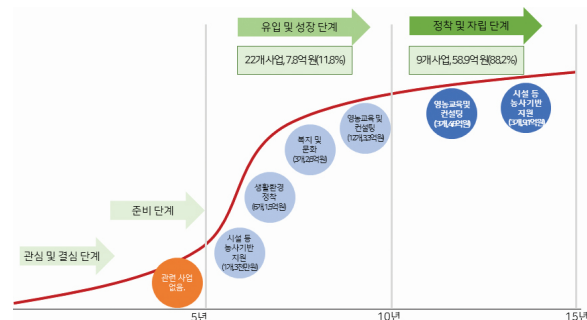
유입 및 성장 단계에서는 영농교육 및 컨설팅 영역에 가장 많은 12개 사업(3.3억 원)을, 나머지 생활환경 정착 영역, 복지 및 문화 영역, 시설 등 농사기반 지원 영역 순으로 투자하고 있다. 정착 및 자립 단계에서는 생활환경 정착 영역에 3개 사업(45억 원), 시설 등 농사기반 지원 영역에 3개 사업(9.1억 원), 영농교육 및 컨설팅 영역에 3개 사업(4.6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2022년 기준만 한정해서 본다면, 분석결과를 통해서 ① 충남의 청년농업인 사업은 타 영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투자, ② 청년농업인 삶 전체 주기로 봤을 때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 결심, 준비하는 단계'에 대한 투자는 소홀, ③ 개별적·분산적·시혜적·단편적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중장기 통합적 관점의 정책성과 창출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단계별-정책영역별 예산 현황(2022년 본예산)

(단위 : 개, 천 원, %)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개수	예산액(천 원)	비중(%)
유입.성장단계	소계	22개 사업	789,578	11.8%
	영농교육 및 컨설팅	12	335,880	5.0%
	시설 등 농사기반 지원	1	30,000	0.5%
	생활환경 정착	6	154,748	2.3%
	복지 및 문화	3	268,950	4.0%
정착.자립단계	소계	9개 사업	5,891,020	88.2%
	영농교육 및 컨설팅	3	468,000	7.0%
	시설 등 농사기반 지원	3	915,400	13.7%
	생활환경 정착	3	4,507,620	67.5%
총합계		31개 사업	6,680,598	100.0%



자료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세출합본예산서 : 본예산기준.

둘째, 충남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수혜 대상자 중심으로 영농정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²⁾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대상자 유형을 구분해보면, 비승계형 창업농업인이 120명(60%)으로 승계형 창업농업인 80명(40%)보다 많았다. 대상자 중 196명(98%)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5명(37.5%), 농사만으로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103명(51.5%)으로 가장 많았다. 위기신호가 감지되는 대목이다(〈표 2〉 참고).

〈표 2〉 영농정착 여부 및 영농으로 인한 생계유지 여부

(단위 : 명, %)

구분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합계
현재 영농 여부	196 (98.0%)	4 (2.0%)	-	200 (100.0%)
안정적 영농 정착 여부	73 (36.5%)	75 (37.5%)	52 (26.0%)	200 (100.0%)
농사만으로 생계유지 여부	71 (35.5%)	103 (51.5%)	26 (13.0%)	200 (100.0%)

- ② 과반수 이상의 청년농업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은 평균 3년 동안 투자하고 있었고 이를 환산하면, 연간 투자금액은 14,772만 원, 연간 평균소득은 4,556만 원으로서 차액은 10,216만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표 3〉 영농을 위한 투자 금액, 영농을 통해 얻는 연간 소득

(단위 : 명, %)

영농을 위한 투자 금액			영농을 통해 얻는 연간 소득		
구분	응답자 수(명)	응답률(%)	구분	응답자 수(명)	응답률(%)
① ~ 5천만 원 미만	31	15.6%	① ~ 1천만 원 미만	9	5.1%
②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20	10.1%	②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103	58.9%
③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107	53.8%	③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39	22.3%
④ 5억 원 이상~	41	20.6%	④ 1억 원 이상 ~	24	13.7%
합계	199	100.0%	합계	175	100.0%
평균 투자연도(년)	3년		연간 평균소득(만 원)	4,556	
평균 투자금액(만 원)	28,951		연간 소득-투자 차액(만 원)	-10,216	
연간 투자금액(만 원)	14,772				

2) 자료 : 충남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수혜 대상자 중심으로 영농정착 실태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목적 : 충남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의 정착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 향후 정책 실행 방안 의견수렴
- 조사기간 : 2022. 11. 18.(금) ~ 2022. 11. 27.(일), 10일 간

- ③ 대상자들이 과거 영농준비 과정이나 현재 영농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웠던 부분은 ‘영농자금 확보’(28.4%~29.4%), ‘농지 확보’(20.0%~24.5%), ‘판매처 확보’(11.6%~15.6%), ‘농작업 인력확보’(10.7%~19%) 순으로 나타났다(〈표 4〉참고).

〈표 4〉 과거 영농준비 과정 및 현재 영농과정에서 어려운 점(3개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1. 과거 영농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		2. 현재 영농과정에서 어려운 점	
	응답자 수(명)	응답률(%)	응답자 수(명)	응답률(%)
① 농사기술 습득 등 교육기회	51	9.1%	40	7.7%
② 영농자금 확보	159	28.4%	153	29.4%
③ 농지 확보	137	24.5%	104	20.0%
④ 농작업인력확보	60	10.7%	99	19.0%
⑤ 재배품목 선택	25	4.5%	11	2.1%
⑥ 판매처 확보	65	11.6%	81	15.6%
⑦ 영농지역 선택	14	2.5%	6	1.2%
⑧ 가족과의 갈등	23	4.1%	10	1.9%
⑨ 마을주민 등과의 관계	25	4.5%	16	3.1%
합계	559	100.0%	520	100.0%

- ④ 대상자들이 농사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안 될 때’라는 응답이 99명(49.5%), 현재 영농실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91명(45.5%),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161명(80.5%)으로 나타났다. 희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서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표 5〉참고).

- 조사주관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 조사방법 :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 토크를 활용한 모바일 설문(URL)
- 조사대상 : 충남 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846명(2018년~2022년) 중 200명(회수율 23.6%)
- 조사내용 : 2개 부문, 31개 항목 객관식(① 인구학적 속성 항목, ② 영농정착 실태 항목) 구성
- 참고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 농에게 2018년부터 영농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창업농에게 3년 간 월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국고70%, 지방비30%)

〈표 5〉 현재 영농실태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농사 지속 여부

(단위 : 명, %)

영농 포기 생각이 드는 순간			현재 영농실태 만족도			향후 농사 지속 여부		
구분	응답자 수(명)	응답률 (%)	구분	응답자 수(명)	응답률 (%)	구분	응답자 수(명)	응답률 (%)
①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안 될 때	99	49.5%	① 매우 불만족	13	6.5%	① 예	161	80.5%
② 지속 투자에도 소득 창출 안 될 때	57	28.5%	② 대체로 불만족	48	24.0%	② 아니오	0	0.0%
③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울 때	15	7.5%	③ 보통	91	45.5%	③ 잘 모르겠음	39	19.5%
④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쉽지 않을 때	10	5.0%	④ 대체로 만족	43	21.5%			
⑤ 건강에 이상신호가 올 때	19	9.5%	⑤ 매우 만족	5	2.5%			
합계	200	100.0%	합계	200	100.0%	합계	200	100.0%

충남의 청년농업인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충남 청년농업인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은 크게 모두를 위한 공통 전략, 겸업 청년농업인을 위한 유입 전략, 전업 청년농업인을 위한 육성 전략으로 구분한다.

첫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전략은 다음과 같다.

- ① 청년농업인 혹은 청년농부 개념과 의미를 확장한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자만 청년농업인이 아닌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일도 하면서 마을일도 하는 이, 마을 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모해가는 이도 포함” 등으로 개념과 의미를 확대한다.
- ② 정책대상자 기준을 조정한다. 예를 들면,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은 만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 특성(고령화, 감소화)을 반영하여 상향조정 검토,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외에도 지역거주, 지역활동 등 다양한 기준도 추가하도록 검토한다.
- ③ 정책 추진체계를 준비한다. 예를 들면, ‘청년이 농업에 기웃거리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관심.결심.준비 단계의 정책, 부서별·개별적·단편적·분산적 사업을 지양하고 ‘청년 한 사람 삶의 주기’를 중심에 놓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통합부서(팀)설치 혹은 컨트롤타워 구축, 통합시범사업 실행, 중간지원조직 협업을 구축한다.
- ④ 든든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예를 들면, 이전소득(충남 농어민수당, 공익직불금,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등), 농업소득(연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연중 생산가능한 시설채소류 작목재배 유도), 농외소득(마을 청년활동가 등이 마을일자리에 참여하여 활동비 및 인건비 지원)을 고른 비중으로 구성한다.

- ⑤ 마을 주체들의 인식변화, 제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마을 내에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 마을주민으로 인정받고 소속감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예. 지역농협 임원진 구성 시 청년농업인 의무할당 제도 도입, 각종 마을단위 사업의 최종 성과지표에 청년유입인구수 등을 포함).
- ⑥ 정책홍보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모색한다. 예를 들면, 도농교류 활동 중 도시 청년들에게 농적 가치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청년정책+청년통계+지역 관련한 정보’를 모아놓은 통합플랫폼, 지역청년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긴 지역매거진을 발행한다.

둘째, 겸업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촌문화를 접하기, 농촌주민과 어울리기, 농촌지역에 정착하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예를 들면, 농촌 한달살이, 농촌 100일 살이, 협업농장 농사실습활동, 농촌봉사활동, 농작업 일손돕기 활동 등 도농교류, 이들과 관계인구 맺기를 시작한다.
- ② 사회적 농업과 청년, 지역을 연결한다. 주체별 역할로서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의 단계별, 시기별 프로그램을 진행, 지역 주민은 청년농업인 교육에 참여하여 사회적 농업 체험기회를 제공, 청년 농업인은 기술 습득 및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③ 현장 농사실습과 교육을 연결한다. 예를 들면, 실천농장(인큐베이팅) 발굴, 마을이 함께 청년에게 농촌과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농장 발굴, 서로의 특성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농장 발굴,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도 자체사업)’을 이어간다.
- ④ 청년들이 재능과 특기를 마을 일자리와 연결한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마을 내 일자리 수요 발굴(취약계층 돌봄, 집안 간단 수리, 교통약자 이동수단 지원, 공동급식, 사진촬영, 문해교육 등), 참여하는 청년에게 활동비, 인건비를 지원한다.
- ⑤ 다양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활동가를 양성한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 연결하는 유통지원 활동가 양성,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 지원,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단 개발지원, 지역 내 로컬푸드 레스토랑 창업 연결하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
- ⑥ 청년농업인들의 네트워크 공간, 공유 공간, 창업공간을 조성한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유희공간(농협 창고, 각종 회관 등)실태조사, 지역 내 청년사업가·청년농부·청년활동가 네트워크 모임 지원, 청년 간 협업하고 교류하는 공간 지원, 창업 인프라 구축, 청년창업농 간 커뮤니티 활성화, 작목별 커뮤니티 활성화(정보교류 등)를 장려한다.

셋째, 전업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사 기반인 농지를 확보한다. 예를 들면, 상속농지 미 경작 시 공공임대 및

경영이양 의무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지원사업, 공유지 공공 장기임대 농지사업, 시설 장기임대사업, 공공 임대형 농장 운영, 일본의 '마을농지-마을사람 플랜'과 같이 지역단위 농지위원회 구성, 농지임대 시 재배품목 조건 완화, 재배품목에 맞는 적절한 농지매칭, 재촌지주 임대수탁 활성화 및 임대차 허용, 실시간 농지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 ② 경영실습과 지역경험을 연결한다. 지역에 들어와서 준비기간 동안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전 과정에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 지원을 노력한다. 예를 들면, 마을 내 공공형 경영실습 및 교육 임대농장 조성, 시설하우스 임대농장 확보, 청년농업인이 공동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협업농장 조성(OJT방식의 농사실습, 지역정착, 어울림, 기술교육, 주택, 농지 제공), 농기계 및 품목별 심화교육도 실행한다.
- ③ 신중하게 영농자금을 확대한다. 예를 들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초기 단계부터 대규모 투자와 빚으로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 단계별 자금지원, 조건 차등화, 성장 단계에 따라 대출금과 융자금 상환기간 차등화,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활용한 이자율 인하·이자보전·무이자, 대출 부추기는 행정의 과대홍보 및 보조사업을 지양한다.
- ④ 농산물 유통망을 확보한다. 예를 들면, 도매시장 외에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 유통채널 확보, 지역농협이나 지자체 등에서 공공먹거리 조달경로 연결, 지자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와 연결, 농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활동가를 양성하고 연결한다.

충남의 청년농업인 정책은 “청년농업인 한 사람이 농업에 올인하는 삶도 있지만, 농촌 지역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경험해보다가 농사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점차 지역주민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 농사일에 직접 뛰어들지 않더라도 농촌의 주민과 농민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삶” 등을 다양하게 그려낼 수 있도록 공백이 발생한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범주는 “농산물 생산만 하는 게 농업인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을 가지고 유통, 가공, 판매를 돕는 이들, 거기에 종사하는 이들도 모두 농업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이들이 농촌에 어울려 사는 게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마야.이도경(2022),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 전략 연구, 전략연구 2022, 충남연구원(근간).
- 충청남도(2022), 2022년 충청남도 세출합본예산서 : 본예산기준.
- 통계청(2021), 「지역별 고용조사」(MDIS).
- 통계청(2020), 농림어업총조사 :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성비.

충청남도 미래농업을 선도할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이주량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¹⁾

“Production
with Less”와
스마트농업

미래학자들은 농업이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산업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증가와 이상기후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불안정한 산업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의 말처럼 세계적으로 농업을 향한 기대는 충만하지만 농업의 내실은 불안한 양가적 상황에 처해 있다.

2020년 70억 명인 세계인구는 30년 후인 2050년에는 100억 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인구증가에 더해 곡물과 채소 위주의 지구촌 식단이 육류중심으로 옮겨가는 섭생변화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는 30년 이내에 지금보다 60%나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식량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18세기 이래로 지난 300여 년 동안 인구증가와 식량증산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움직였다. 인구증가는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했고, 늘어난 식량은 더 많은 인구를 가능하게 했다.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던 주요 기제는 새로운 농경지의 확보, 하버-보슈법을 활용한 질소비료의 발명, 제초제와 제균제 등 농약의 발전, 다수확 품종개발과 농기계의 발명 등 농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프라 정비의 덕택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래의 지구를 빌려 썼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했다. 농경지의 확보는 산림과 습지의 대규모 파괴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비료의 과도한 사용은 토양오염을 초래했다.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은 수질오염과 생물다양성 위기를 가져왔으며, 농업생산과 전 지구적 식량물류에 사용한 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원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농식품 부분은 전체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기후변화를 초래했고, 농업은 기후변화의 가해자인 동시에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다.

1) 국책연구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연구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농업과학기술, 농업혁신, 농업ODA 분야에서 연구와 저술, 강연을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과학기술계와 농업계의 가교역할을 맡아 왔다.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정책개발, 정부사업기획, 자문 및 평가 등에 참여해 왔다.

과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의 농업방식을 가지고서는 60%나 더 많은 식량을 지속가능하게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인도의 2배 크기만 한 농경지를 산림으로 다시 환원하고 농식품 부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0%를 줄여야 기후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농경지와 농업투입재의 사용은 줄이면서도 농업 생산량은 60% 증가시키는 마법 같은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Production More with Less!” 미래농업은 이 어려운 것을 해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스마트농업에 있고, 이것이 스마트농업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스마트농업과 혁신의 방향성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에 ICT 기술을 결합하여 농업을 경험기반 산업에서 데이터 기반산업으로 전환하는 긴 여정을 의미한다. 스마트농업은 종자, 농약, 농기계, 농자재 등 후방농업에서부터 농업생산(primary Production)을 거쳐 농식품의 가공, 유통, 판매, 저장, 소비, 그리고 마지막 폐기와 순환까지 농업 가치사슬 전반 어디에나 스며들 수 있다.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질수록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원과 노동력의 투입자원은 줄이면서도 생산효율과 부가가치는 높이는 “Production More with Less”에 가까워질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인 농업을 탈탄소 체질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선택적 수단이 아니라 필수적 수단이기도 하다. 스마트농업에서 혁신의 방향성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 있다. 첫째는 AI, 빅데이터, IoT, 위성기술 등을 사용하여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을 초정밀하게 만드는 것이다. 초정밀제어를 통해 농업생산에서 필요한 물, 농약, 비료 등 투입재를 가장 정확한 시기에 꼭 필요한 양만 투입할 수 있다면 생산비용은 90% 줄이면서도 생산량은 30% 늘릴 수 있다.

둘째는 완전히 새로운 농업시스템과 미래식품을 적극 개발하는 것이다. 인공광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실내농업(Indoor Farm) 기술이 발전하면 아파트단지 내부, 유통업체, 대형병원, 구도심 슬럼지역 등 유희 실내공간 어느 곳이나 농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원예작물(과수, 화훼, 채소) 재배가 실내에서 이루어지면 푸드 마일리지는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기존 원예작물이 차지하던 농지에는 식량작물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농지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대체육류도 미래를 위한 혁신 아이템이다. 대체육류가 확대될수록 가축사육에 필요한 초지는 줄이고 가축의 물소비량과 탄소배출, 분뇨처리 부담 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환경부하가 적은 수산물과 해조류도 적극 확산시켜야 할 미래식품이다.

셋째는 노지, 시설원예, 축산 등 농업 전분야에서 인간노동을 지능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지구 전체로 보면 선진국과 식량작물은 기계화 비율이 높지만, 개도국, 후진국, 비식량작물 등은 여전히 악성노동 상황에 놓여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연해주 등 과노동 저생산성 지역의 농업노동을 기계화하고 지능화하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아울러 드론, 로봇, 위성 등 신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기계화가 불가능하던 농작업까지 완전한 자동화가 가능해지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의 유통물류와 소비패기 과정에서 혁신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식품 중에서 30%는 소비되지 않고 폐기되어 자원을 낭비시킨다. 하지만 생산과 소비 정보의 실시간 교류와 역방향 교류가 가능해지면 드라마틱한 낭비 감소가 가능해진다. 마켓컬리, 쿠팡잇츠, 프레시지, 정육각, 트릿지, 아마존프레시 등은 식품의 유통물류와 소비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혁신기회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스마트농업과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농업 지역으로 한국 전체 농업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충청남도는 경작지(arable land) 면적 3위, 재배(cultivation land) 면적 2위, 식량재배 면적 2위로 농지조건이 양호하고, 농작물 생산량, 농산물 소득, 농가수와 농가인구 등이 모두 1~2위의 상위권에 위치한다. 스마트농업의 핵심영역이 되는 시설원에 재배면적은 11,389ha로 1위 경남의 11,640ha와 비슷하여 국내 전체 시설원예의 20% 이상을 차지한다(2020년 기준). 한국 축산업에서 차지하는 의미도 깊다. 충청남도 홍성은 조선시대부터 목축업이 발전한 지역이었고 1970년대에는 정부의 양돈산업 현대화 정책을 통해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받아온 현대 한국양돈의 대표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중심에 위치하여 수도권으로의 접근성도 양호하고 도농업기술원과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연구수준도 우수한 편이다.

서산 AB지구 간척지와 보령발전소 등 타도지역에는 없는 미래농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충청남도만의 차별화 포인트도 가지고 있다. 미래농업 관점에서 보면 서산 간척지는 대규모 스마트원예시설, 스마트축산지구, 조사료 집중생산지구로 개발이 가능하고 보령발전소는 축산분뇨의 고체연료화, 바이오차(biochar) 등 미래 경축순환과 물질순환의 핵심허브로 개발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충청남도 농업 발전전략의 또 다른 주요 차별화 포인트는 유기농업의 진흥이다. 스마트 유기농업지구를 조성하고 더 많은 충청남도의 농업인들이 유기농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도농상생을 통해 새로운 경제모델을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 스마트농업에서 특이한 점은 민간의 혁신 노력은 타도와 비슷하거나 앞서 있지만, 스마트농업 국책사업이나 인프라 유치 실적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민간영역에서 충청남도 부여에 있는 우듬지는 11ha, 3만 5,000평 규모 스마트 유리온실로 국내 최대 스마트 토마토 농장으로 타 지역 스마트팜들이 가장 따라하고 싶어하는 선도모델이다. 우듬지는 2023년 2월에는 대통령의 UAE 순방에 동행하여 한국 스마트팜의 기술력과 우수성을 중동지역에 널리 알렸고, 실제로 1,080만 달러(한화 132억 원)의 MOU를 체결하는 수출성과도 거두었다. 충청남도 홍성 원천마을의 농업회사법인 성우는 국내 단일농장 최대규모의 가축분뇨 에너지시설인

‘원천 에너지 전환센터’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으며, 농업과 에너지의 결합에서 한국형 미래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농업회사법인 성우는 데이터기반 양돈업 혁신, 복합사료의 지역단위 공급모델 혁신, 축산분뇨 에너지의 경축순환과 마을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기술 혁신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뿐 아니라, 논산과 금산의 선도농가들, 부여의 굿뜨레 10품 재배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스마트 농업시설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과 실적에 비하여 공공영역에서의 성과는 아쉬움이 남는다. 농식품부의 스마트농업 대표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남 고흥, 전북 김제, 경북 상주, 경남 밀양 등 충청남도를 빗겨나갔고, 2022년에는 총사업비 4,079억이 투입되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사업’에서는 전남 해남이 적격지로 선정되었다.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092억 원의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전북 새만금 농생명 용지로, 50ha 규모의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는 전남 나주로,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 사업의 경우 쿤은 충북 괴산, 사과는 경북 안동 등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핵심 사업 모두가 충청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이처럼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신사업들이 충청남도를 계속해서 빗겨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새로운 전략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청남도의 스마트농업을 위한 제언

앞서 서술한 것처럼 충청남도는 스마트농업에서의 민간의 역량과 농업의 위상이 타도대비 전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충청남도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잘 활용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적절히 결합하면 충청남도가 한국의 스마트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농업을 향한 충청남도의 전략도 다른 지역이나 국가 전체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충청남도의 외부인으로서 그리고 중앙정부 사업을 오랜 기간 살펴본 저자의 시각으로 성글지만 삼농의 지역인 충남을 위한 제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지정학적 차별성과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충청남도에는 1978년부터 개발된 서산 AB지구라는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자원이 있다. 서산 AB지구는 한때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1%를 차지할 정도의 대형농지이다. 간척지는 염수라는 약점이 있지만 서산 AB지구는 오래 되었기에 타지역 간척지에 비하여 염피해가 적을 뿐 아니라 염의 약점을 상쇄할 대규모 평활지라는 강점이 있다. 일본이 구보다, 안마, 이세키 등 세계적인 농기계 기업군을 육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북해도의 평활지를 기계화하면서 부터이다. 오늘날 일본의 농기계 회사들은 현(縣)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계가 일상화되어 있고, 특히 스마트 농업기술을 농기계에 탑재하여 다음 세대가 더 큰 면적에서 더 편하고 정확하게 농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세계적인 스마트 시설원예강국이 될 수 있었던 동력은 35만ha에 이르는 자이더르

해(海, Zuiderzee)에 대규모 간척지를 조성한 이후 염지에서 할 수 있는 농법으로 간척지 위에 온실을 세우는 시설원예를 집중 육성하면서 부터이다.

충청남도도 AB지구를 스마트농업에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충청남도가 추진하려는 서산 AB지구의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사업의 방식과 규모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만 39세까지로 적용되는 청년의 대상기준을 확대하여, 경험과 자본력을 보유한 50대 초반까지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고, 단순한 영농단지 조성을 넘어서 선도농과의 매핑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과 노동력 공급 프로그램과의 연결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 작목관점에서도 딸기, 토마토와 같은 기존 작목의 반복적 답습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제2의 딸기로 육성될 가능성이 높은 버섯류나 박과류를 충청남도가 먼저 집중 육성하는 것도 전략대안이 될 수 있다.

서산 AB지구 뿐만이 아니다.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보령발전소에 가축분뇨 에너지 펠릿화 사업을 더욱 확대하거나 가축분뇨의 수거, 채집, 운송 등 일련의 작업들을 정보화하여 타 지자체보다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스마트하게 혁신하는 노력을 먼저 시작하는 것도 충청남도만의 자원을 활용하는 좋은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둘째는 현재 충청남도의 스마트농업 전략은 기존 농업인과 농업의 범위 안에서 중앙정부의 스마트농업 전략을 지자체에 맞게 축소시켜 적용하는 것이 주류이다. 하지만 민간이 강력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정부 사업의 축소 적용에만 머물지 말고 지금보다 창의적인 전략을 고민하고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계 외부의 비농업계와 스마트농업의 커플링을 확대하는 것이다. 스마트농업은 농업계 내부보다 농업계 외부와의 커플링에서 더욱 빠르게 발전 중이다. 기존 농업인 관점에서 스마트농업을 접근하는 것과 함께 농업의 종착지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스마트 농업을 접근하는 전략적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스마트팜의 선두주자인 엔씽은 경기도 이천에서 이마트 바로 옆에 컨테이너 스마트팜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 전량을 이마트로 실시간 공급하고 있다. 생산과 판매가 동일시점, 동일공간이기 때문에 푸드 마일리지와 리스크가 제로에 가깝다.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스마트 컨테이너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등 생산 리스크도 거의 없다. 엔씽 모델은 기존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와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최귀위 수준의 스마트농업을 구현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호응도 높고 지역 청년고용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나다. 충청남도도 스마트농업을 기존 농업계의 범위 안에서만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충청남도가 나서서 비농업계 출신의 민간 스마트농업 모델을 적극 도입한다면 기존 농업인들의 혁신 노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기존 농업인의 생력화와 간편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서비스 모델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충청남도에는 도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농업연구기관의 수준이 우수하고 농협, 생산자 단체, 육묘장, 로컬푸드체인 등

농업인에게 농작업 서비스와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다. 이들을 스마트농업 네트워크로 묶어서 단순하지만 실효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성의 포도작목반처럼 동일작목의 농장을 네트워크화하여 센서와 IoT 장치로 연결하여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도 병충해의 예방과 재해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충청남도가 나서서 스마트농업 기술을 시연하고 교육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스마트팜 설립하고 교육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립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노동력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농번기 계절노동자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도작의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자동논물고 개폐기 사업 등도 적용가능 할 것이고, 체험농업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의 농장들과 도시의 체험희망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련의 활동 속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하고 서비스 품질 자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스마트농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충청남도에는 우리나라 농업 전체가 가진 똑같은 문제들이 한 가득이다. 고령화된 농업 인구와 농업 생산인구의 공동화, 소규모 농장으로 인한 규모의 한계, 농업기술과 관행에 대한 농업인들의 보수성, 기후변화 심화와 극한기상의 상시화, 판로개척의 어려움, 전통작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 농업에너지 비용의 상승, 농업 환경부하 심화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특히나 지금처럼 기존의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더더욱 해결되지 않는다.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력의 문제이며 도전과 열정의 문제이다. 민간의 농업역량과 스마트 농업수준이 높은 충청남도에서 전통농업의 관행을 앞장서 개선하고 농업인과 기업,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한국 스마트농업의 요람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충남 농촌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육성 전략¹⁾

유학열 |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충남은 물론 전국의 농촌지역에서는 마을 소멸,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이젠 귀에 익숙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농촌지역의 인구 문제는 단순히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양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 인구비율의 급감 및 고령인구 비율 급증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이라는 질적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농촌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농업·농촌인구 유입(귀농귀촌, 창업창농 등)정책 및 인구유출 억제(출산, 보육, 교육지원 등)정책 등 다양한 시도를 해 왔지만 뚜렷한 효과 없이 정책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농촌인구 문제 해결에 있어 인구수를 늘리는 방안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은 분명 녹록치 않으며 실효성이 높지 않다.

또한 농촌지역의 사람(인력) 문제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마을(지역)을 건전하게 이끌어 갈 활동가(리더)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농촌마을 단위의 각종 농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통해 많은 마을 활동가(리더)가 발굴·육성되었다. 하지만 발굴·육성된 인재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공모형식으로 추진된 마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라 할 수 있다. 요즘처럼 급변하는 지역 내·외부의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더 나아가 이전의 마을개발사업으로 발굴·육성된 인재들도 고령화로 인해 그 위치에서 은퇴하거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농업노동력 측면에서의 인재가 아닌 과소화, 고령화로 인해 쇠퇴,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충남 농촌지역(마을)을 건전하게 이끌어 갈 인재를 어떻게 발굴 및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본고는 2022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충남 농어촌 과소지역 활성화 전략'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힘

충남 농촌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 전략

1) 충남 농촌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과소지역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젝트 목표는 교육생에게 농어촌 과소지역에도 희망이 있으며 새로운 의지와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및 교육생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 잠재력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데 있다. 교육 대상은 지역주민은 물론 충남 농촌지역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도시청년 등이다. 프로그램 운영 기본 원칙은 ①체계적·통합적 역량 강화, ②실천을 중시하는 실무형 교육, ③교육과 실천의 연계 체계 구축에 있다.

여기서 제시한 체계적·통합적 역량강화란 주민참가와 협동, 환경, 경관, 지역경제 진흥, 지역경영 등 농촌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는 것이다. 실천을 중시하는 실무형 교육은 통상적인 강의 이외에 워크숍, 토론 등의 참여형 학습을 적극 도입하고 전문가, 행정, 민간의 실천가 등 다양한 멘토진의 실천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교육과 실천의 연계 체계 구축은 교육과 실천 활동이 반드시 현장의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으로 구분하며 과정별 목표와 주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농촌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 프로그램 예시

과정	핵심가치	교육 목표
기본과정	리더로서의 기본적 소양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참여 및 지속적 학습의 동기 부여와 자기혁신 - 농업·농촌을 포함한 현대사회 전반의 문제 인식 - 균형 잡힌 마을리더가 되기 위한 자기개발방법 습득 - 외부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관계 구축
심화과정	지역의 가치발견과 비전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지역문제의 이해 - 지역/마을자원의 중요성 인식과 조사방법 습득 - 지역의 미래비전 구상 - 마을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
전문과정	지역 활동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 과정 - 6차산업화 과정 - 마을문화리더 과정 - 충남 농어촌 재생 청년특화사업단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충청남도에서 직영하는 방식보다는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교육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교육기관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역대학 또는 충남도립대학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농어촌 지역활동가 육성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충청남도지사가 인정하는 수료증을 발급해 주며, 실제 과소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충남 농어촌 재생 청년특화사업단

여기서 말하는 ‘청년특화사업단’은 읍·면단위에 설치하며, 농촌 지역 활동가(농민단체 리더, 귀농인 리더 등)가 해당 읍·면에 거주²⁾하면서 관할 농어촌 마을(행정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청년특화사업단’의 주요 활동은 첫째, 농촌 ‘면’ 단위 현장밀착형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 지원한다. ‘청년특화사업단’은 농촌지역 밀착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각종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정책사업 수탁 시행, 비영리 수익사업 수행 등을 담당한다. 둘째, 농촌 ‘면’ 단위 학습조직 구성 및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사업단을 중심으로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지역문제를 진단한다. 또한 공동학습회, 주제별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농촌마을 중장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셋째, 배후마을 지원을 위한 ‘청년 도우미’를 채용하고 정착 지원한다. 농촌 ‘면’ 단위에서 경관환경, 주거복지, 통합돌봄, 유희 공공시설 관리 등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청년 활동가(청년 도우미)를 채용하고 활동, 정착하는 데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청년특화사업단’은 충남도 또는 시군에서 공모를 통해 모집하는 방식으로 하되, 농촌지역 개발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참여경험이 있는 지역활동가 및 농촌 지역 각종 단체(농민단체, 귀농인 단체 등)의 리더가 지원 가능하다. 본 사업의 추진은 충남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되 실제 사업의 운영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시군에 조직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충남 농촌 과소지역과의 단계별 ‘관계 맺기’ 프로젝트

농촌 과소지역 인구 감소 및 청년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구의 적극적 유입, 이주시키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지만, 신규 귀농·귀촌인의 농촌 거주에 필요한 주택 및 토지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원활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으로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인구’가 주목받고 있다. 농촌 과소지역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관계인구를 창출하고 지속적 관계를 맺게 하느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농촌 과소마을과의 단계별 ‘관계 맺기’ 프로젝트(이하, ‘관계 맺기 프로젝트’)는 관계인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 맺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계 맺기 프로젝트’는 도시민들이 농촌 과소지역에 관심을 갖고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인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단순히 농촌 과소지역에 단기간 ‘살아 보는’ 단계에서부터 농촌 과소지역에서 다양한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단계별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2)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해당 읍면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1단계(체험형 살아보기)에서는 충남 농촌 과소지역에 단기간(1주일 이내) 체류하면서 특별히 규정된 활동 없이 자유롭게 농어촌 과소지역을 탐색, 체험하는 단계이다. 살아보기 기간 동안 참가자 느꼈던 농촌지역의 문제점, 참가자 본인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만을 의무 활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또는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살아보기 참가자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지원을 한다.

2단계(탐색형 살아보기)에서는 충남 농촌지역에 일정 기간(2~4주) 거주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농촌 지역주민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 등을 하면서 농촌지역, 농촌지역주민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이다. 참가자는 반드시 주민들과의 교류를 하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살아보기를 마치면 실제로 실천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의무로 한다. 충남도 또는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살아보기 참가자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며,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3단계(활동형 살아보기)에서는 충남 농촌 과소지역에 실제 거주는 하지 않지만,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일정 기간(3~6개월) 지속적, 정기적으로 하는 단계이다. 3단계 참가자는 앞선 1단계 또는 2단계에 참가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혜택을 준다. 참가자는 해당 농촌 과소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활동 예시로서는 해당 지역 빈집 실태 조사, 재능 기부 활동(문화, 교육 등), 공공기관 인턴 활동 등이 있다. 충청남도 또는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살아보기 기간 숙소 제공과 소정의 활동비 지원을 해야 한다.

〈표 2〉 단계별 '관계맺기' 프로젝트 내용

단계	형태	기간	주요 내용
1단계	체험형	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된 활동 없이 자유롭게 농어촌 과소마을 탐색, 체험 - 탐색, 체험을 통해 농어촌 과소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점 제출
2단계	탐색형	2~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재능기부 활동 필수 - 사전에 살아보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 살아보기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3단계	활동형	3~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과소마을 활성화를 위한 활동 실시 -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 - 활동 예시: 빈집 실태조사, 재능기부 활동, 공공기관 인턴활동 등

4) 전국 대학생 충남 농촌 재생 공모전

충남 농촌 과소지역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해서는 미래 우리 지역을 이끌고 나갈 청년층이 농촌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촌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농촌 재생 공모전'은 충남 농촌마을과 전국 대학생(대학원생)간의 다양한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대학생들에게 농촌지역에서 본인들의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물론 이전부터 일부 대학의 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농촌일손돕기, 마을어르신 돌보기, 마을 청소 등의 활동을 해 오고 있으나, 그 활동의 폭과 깊이가 침체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농촌일손돕기와 같은 단순하고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구상하고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다.

'농촌 재생 공모전'은 전국 모든 대학생(대학원생, 전공 불문)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이다. 공모전 희망자(4~5명 팀으로 구성)는 실제 존재하는 충청남도 농촌 과소지역(읍면~행정리)을 선택하고 선택한 농촌 과소지역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는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프로젝트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활동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완료 후 성과발표회를 해당 마을주민들과 함께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마을에서 활동하기 전에 본 공모전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 설명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총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프로젝트팀 구성은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대학생(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도교수 1명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같은 대학이 아닌 타 대학과 연합해서 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이 포함되는 것을 권장한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 표창 등 관계 기관장의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전국 대학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어 올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일회성을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등 전국 대학교 관련 조직, 협회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충청남도 담당부서는 사전에 관련 조직, 협회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한 후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프로젝트의 실제 추진은 농촌활력과에서 직접 하거나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맺음말

농촌지역이 쇠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농촌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지만, 발굴·육성된 인재를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

본 고에서 제시한 몇 가지 전략에 대해서 충남도 또는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화 실현을 위해 면밀히 검토해 나갔으면 한다. 정책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염두해 두었으면 하는 점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내부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지역 외부에 있는 인재들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 인력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도 적지 않다. 둘째, 충남 지역 내 대학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 농학계열 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전공과 무관하게 농촌,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본인들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셋째, 필요한 재원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농촌지역 인재를 육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들이 충청남도 농촌지역에서 실현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못하고 있는 농촌인구 문제, 농촌리더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다.

치명적 가뭄에 대비한 지하물 이용방안 모색

이상진 |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영일 | 충남연구원 전임선임연구위원

이 샘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구의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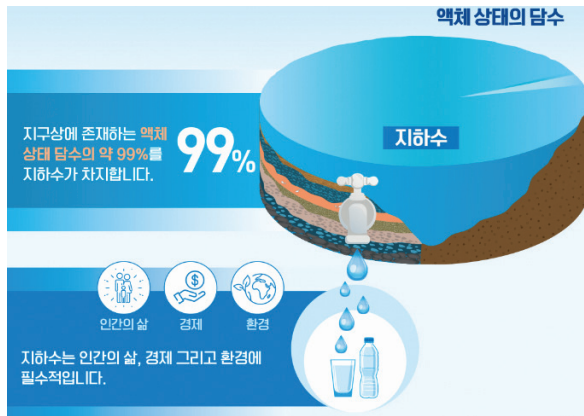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우주변화의 원리』에서 ‘우주는 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만물의 근원인 물은 고요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존재다. 평상시에는 지표와 지하에서 낮은 곳을 찾아 바다로 흐르는 생명수로 인간의 활동에 따라 가뭄과 질병으로 고통을 주며, 때로는 집을 무너뜨리고 마을과 도시를 삼켜버리는 무서운 존재다.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구상 물의 양은 큰 차이가 없다. 기상현상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형태를 달리하며 대기 중과 지표면을 이동하면서 지역에 따라 가뭄을 유발하거나 홍수를 일으킨다.

물은 지구상에서 생명체와 무생물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순환과정에서 모든 생명체는 물을 활용할 뿐 아니라 지형변화와 에너지 및 물질의 변화에 관여하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물은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물관리의 기본은 나라별, 유역별로 우기에는 지표는 물론 지하에도 물을 가두고, 우기에 황급하게 하류로 배출하려 등 물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반대로 시행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점점 부족해져 많은 갈등을 낳는다.

지하의 물

지구상에 무궁무진한 물이 있으나, 우리 인간이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해수가 무려 97.2%에 이르고, 담수는 2.8%에 불과하다. 담수도 대부분 빙하(2.15%)로 존재하고, 보이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지하수(0.62%)로 존재한다. 결국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강과 호수 등 지표수는 0.03%에 불과하므로 지하수의 관리와 이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료 : 카드뉴스, 환경부

2022년 12월 UNESCO가 주최한 제1차 지하수에 관한 UN-Water 정상회의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라는 슬로건으로 지하수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지하수가 빗물과 함께 시냇물, 강, 호수 및 습지의 주요 물 공급원이지만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대수층 물을 순환량에 맞도록 펌프와 우물을 통해 지상에서 잘 뽑아 써야 한다는 관점이다. 즉, 지하수는 인간의 삶과 경제 환경에 필수적 요소로 액체 상태의 담수량이 지표수보다 20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하수 이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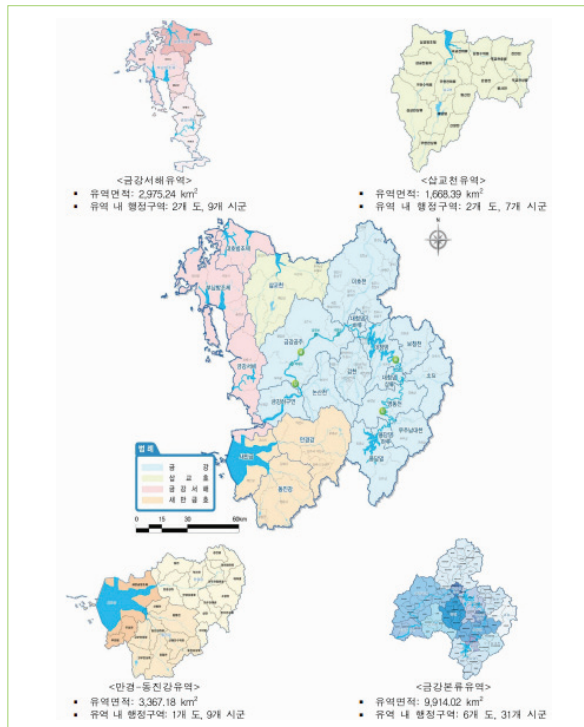
금강유역과 충남의 물

충청남도가 위치한 금강유역의 총면적은 17,924.83km²이며, 4대 유역으로 나뉜다. 금강본류유역의 면적비율이 55.3%로 대전·세종 등 8개 광역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으며, 전북 중심의 만경·동진강유역의 면적비율은 18.8%이고, 충남 중심의 삽교천유역과 금강서해유역의 면적비율은 각각 9.3%와 16.6%이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강수 조건에서는 유역면적이 넓으면 물의 양의 많아진다. 금강유역에서 금강본류유역과 삽교천유역이 많은 유역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활, 공업, 농업 및 자연용수 등 모든 분야에서 쓸 수 있는 물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용수까지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위치한 유역은 연간 물의 절대적인 양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강수량 등 기후 및 지역 조건에 따라 일시적인 부족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충청남도는 물을 관리하고 이용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유역 조건이지만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매우 높다. 농업용수는 대부분 지역 단위별로 하천과 저수지, 그리고 담수호 등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지표수 공급이 어려운 곳은 농가별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광역상수원인 보령호(댐)와 대청호(댐)의 물을 정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보령호는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가뭄으로 담수량이 부족하여 금강 본류의 물을 보충하여 사용하고 있어 오염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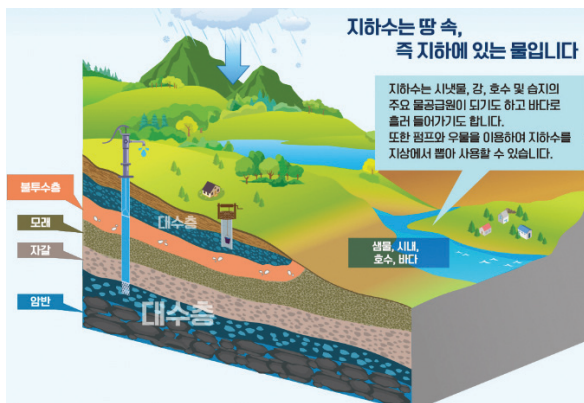
자료 : 제1차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호는 원수의 장거리 이송에 따른 에너지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있다.

지하수의 호혜적인 이용방안

가. 지하수 이용의 기본방향

물의 절대량은 바닷물을 포함한 지하와 지표에 무관하지만, 염도가 높거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이 있는 물은 직접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용가능한 물이 있으나 공급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부족함을 경험하게 된다. 유역단위별로 치명적인 가뭄에 대비하고 부족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하에 있는 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 카드뉴스, 환경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은 지하수는 지표수보다 훨씬 많지만,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지표와 달리 토양 공극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마찰력이 커서 이동속도가 매우 느리다. 만일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뽑아 쓰면, 강수에 의해 다시 채워질 때까지 주변에 가뭄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이용하기에 앞서 지하수 순환량과 순환 주기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이용량이 채워지는 양보다 많다면 빗물 등으로 지하수를 채우는 사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지하에 있는 물을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자연과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도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지하수는 무분별한 취수를 제한하고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생활용수로 사용하였더라도 처리 후 농업 또는 공업용수로 재사용하거나 건전화된 하천에 방류하여 주변 생태계에 이롭게 해야 한다.

나. 충남 지하수 현황

충남도 내 지하수 함양량은 연간 15억5311.8만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청호 총 저수량 14억9000만톤에 버금가는 양으로 이 가운데 개발가능량은 11억165만톤 정도로 파악된다. 현재 지하수 관정 282,179공에서 연간 3억6675만톤을 이용하고 있어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은 33.3% 수준이다.

다. 독일의 지하수 이용 사례

바벤하우젠에 있는 수자원 관리시설(ZVG Dieburg)이다. 유역 안에 있는 여러 시에서 투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합자회사에서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운영한다. 13만명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취수원은 100% 지하수를 사용한다. 숲과 농경지 30~60m 깊이로 20개 지하수 취수공이 있는데 이 가운데 10개 공씩 교대로 운영 중이다. 또한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10년간 가뭄에도 4% 수위가 낮아질 뿐 매우 안전하다 한다.



[사진] 수자원관리시설 전경



[사진] 지하취수공 개념도

정수 과정은 뽑아온 지하수에 일차적으로 공기를 공급해 철과 망간을 산화시켜 침전으로 제거한 다음 자갈과 모래를 층층히 채운 18개 통을 사용하는 것이 전부다. 필요에 따라 마지막 단계는 CO2를 주입해 탄산수를 공급한다. 지하수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포함한 오염물질이 거의 없어 화학적 처리가 전혀 없다. 화학적 처리공정이 없는 기술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꾸준히 연구한다고 한다. 물론, 여과시설 역세척 수는 다시 처리하여 공업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며, 정수한 물은 매 2시간마다 검사를 한다.



[사진] 여과시설



[사진] 여과-전후 비교

시사점과 정책 제안

가. 시사점

금강유역에 위치한 충청남도 물관리 여건은 유역별 강수조건과 이용량, 이용형태, 이용 방식에 따라 유역별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수량적인 고통은 크지 않다. 일부 유역은 수질오염으로 직접 이용할 수 없어 여러 단계 처리공정을 거쳐 쓸 수 있는 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일부 유역은 광역상수도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어서 광역유역 간 갈등이 있다. 또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별 공급시설과 관리체계가 달라 시기적으로 물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석회암 지대의 유럽과 물의 절대량이 부족한 여러 나라를 고려하고, 현무암 지대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중심으로 물 자립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시에 비하면 충청남도는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다. 대청호와 보령호 광역상수도 시설로 충청남도 지역에 공급하는 생·공용수 수원은 모두 지표수이다. 상류 유역에 도시, 축사, 산업시설 등이 위치하는 한 아무리 깨끗한 호소수라도 지하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오염물질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하수 공급 여건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중수원을 고려하는 상수도 전환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지표에 물이 많은 시기(평수기~홍수기)에는 지표수를 중심으로 취수하고, 지표수가 부족한 시기(저수기~갈수기)에는 지하수를 취수하는 근거리 다중취수원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나. 정책제안

- ① 충남 서북부권 중심으로 배수시설에 호소수, 하천변 여과수, 지하수(지하수댐) 등 다중수원 방식의 취·정수시설 연결로 치명적 가뭄에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
- ② 공급 대상 인구가 1~10만 규모 중소도시는 다중지점 지하수(지하수댐)를 이용한 생활용수 공급시설 도입을 제안한다.
- ③ 지하수 순환량 범위를 벗어난 지하 유역을 중심으로 빗물 투입을 강화하는 Green Infra(빗물 침투 및 저류시설-미국 포트랜드시 사례)를 설치를 제안한다.

참고자료

- 이상진, 정책이슈 리뷰, 충남연구원, 2022년 12월호.
- 환경부, 홈페이지(카드뉴스).
-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제1차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지방시대의 핵심전략, 로컬 창조 활동과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방향

전지훈 |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들어가는 글

언제부터인가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콘텐츠, 로컬 비즈니스와 같은 로컬 관련 용어들이 사회적으로 회자되면서 정책적 영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인프라 구축 및 로컬브랜딩 수립과 같은 지역사회 창조역량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12월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정책지원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로컬 크리에이터에 의한 지역산업은 이제 소규모의 취미활동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핑문화 중심지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밀집한 강원도 양양의 경우 2020년 기준 서핑으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300억 원으로 추정하며 관내 서핑해변에서 연간 50만 명 이상 방문자를 유치하여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부상하였다(모종린, 2021). 인천시의 경우 소멸위기 지역 활성화를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정책지원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는 등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현상은 대도시와 글로벌 중심의 사회문화적 확산에서 지역과 골목중심의 경제, 사회, 문화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변화시킨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로컬에 대한 관심은 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와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쇠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겁고, 지역사회의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주로 생산, 소비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로컬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청년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률적이거나 무조건적 지원보다 지역의 특색에 부합하고 지역주체와 상호협력의 지역성 연계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로컬창조활동의 이론적 배경

로컬(Local)은 어떠한 특정한 도시나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보다 더 고향같은 지역과 장소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 여가 등을 통한 감성적 콘텐츠와 부합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로컬을 주목하고 있다. 모종린(2017)은 이러한 로컬의 장소성과 이에 따른 사람들의 움직임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로컬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가를 ‘로컬 크리에이터’로 정의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로컬을 시골 변두리 정도로 생각해왔지만 최근 지역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는 천편일률적인 대도시 중심의 장소적 특징과는 다른 대안적인 창조적 공간자원으로 ‘로컬’의 의미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개념이나 현상이라기보다 이전부터 특색있는 공간적 매력을 찾아다니고 이에 대한 문화자원 구축과 콘텐츠를 강조한 과거 문화도시나 창조도시의 논의에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지역발전의 전략에서 로컬창조활동의 배경은 국내 20세기 후반 탈추격 패러다임속에서 중앙집중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부 역량 강화와 자원활용에 기반한 내생적 발전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구에서 문화자원으로 인한 장소마케팅에서 나아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주축이 되어 지역 특유의 창조적 산업을 형성하거나 창의적 인재들이 모여들게 하는 지역자원과 문화적 요인에 주목한 창조도시의 맥락을 의미한다. 이후 이러한 논의는 국내에서 2010년 이후 주민과 시민사회에 기반한 사회혁신의 의미로 치환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공동체, 사회경제제, 주민자치 및 참여의 풀뿌리 기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문제에 접근한 사회혁신의 움직임으로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현재의 로컬창조활동에서는 지역의 창의적 활동을 만들어내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강조되고 ‘로컬’ 자체가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창조적 자원 그 자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 특히 김순환 외(2022)는 로컬에 대해 정서적 콘텐츠와 활동하는 공간과 라이프스타일을 강조한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장소성과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 내어 지도상에는 없는 새로운 ‘로컬’을 형성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러한 로컬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확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청년세대가 주도적이다. 기본적으로 로컬을 탐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지역 특색에 기초한 라이프스타일을 찾아 떠나는 것이고 이들이 선택하는 내적 동기와 유인의 지점에서 매력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청년세대 가치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세대에 의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부상엔 리처드 플로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강조했던 ‘창조계급(Creative Class)’의 한국 청년 시각의 재해석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 최근 정책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개념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

구분	주요 내용
모종린 외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과 결합된 콘텐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가, 혁신가 - 로컬푸드, 메이커, 공예공방, 수제맥주, 커피, 도시양조장, 코워킹 등 포함
이원빈 외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인재들이 주도하는 지역특화 자원에 기반한 소상공인의 새로운 유형 - 독립서점, 베이커리, 카페, 양조장,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등 골목산업과 문화창조산업
중소벤처기업부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창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람
창업진흥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자료: 심진범(2021) 참조

하지만 로컬창조활동에서는 청년들을 비롯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창조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활용하여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주민을 비롯한 활동 주체의 현장과 결합이 중요하다. 모종린(2021)은 사람을 공간으로 끌어내는 힘은 지역다움과 지역사회의 구체적 니즈(요구)가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특성의 자원과 문화가 결합된 라이프스타일이 로컬브랜딩의 핵심이라면 외부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현장과 함께 일구어내기 위한 연계와 융합의 활동이 로컬창조활동의 필수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하여 사회혁신과 함께 2010년 초반부터 사회, 정책적으로 주목받았던 리빙랩 개념의 부상은 일견 자연스러운 지점이라 하겠다.

로컬을 브랜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발굴과 확산은 지역의 관심과 재해석, 이에 대한 진정성을 투여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고민과 결과물이다(이병민 외, 2021).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로컬콘텐츠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 지역사회의 자원과 활동주체, 문화적 기반, 주민과의 관계와 협력적 구조 등의 로컬에서 창조를 위한 활동들이 함께 수행되어야 매력적인 로컬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로컬 크리에이터의 창조활동은 지역사회의 로컬창조생태계를 통해 함께 발굴되고, 형성되며, 구현된다는 점에서 로컬생태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로컬창조활동의 사례

현재의 로컬창조활동은 지역사회의 현장을 중심으로 작은 실험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모두 현재진행형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활동중인 초기형태들로 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 두 곳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주시 ㈜퍼즐랩



공주시 제민천은 역사가 깊은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며 이러한 고즈넉한 곳에 4년째 ‘마을스테이’를 수행하는 퍼즐랩은 ‘봉황재 모던한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퍼즐랩은 봉황재의 스테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공주시의 매력을 알리고 마을에서 함께 활동할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기획들을 펼쳤고 지역사회와 느슨한 연대를 구성했다. 이후 2020년부터 지역탐구, 지역살아보기 등 다양한 마을살이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청년들이 로컬에서 일과 삶을 체험해보고 공동체와 관계맺음의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공주시에서 머물면서 창직과 창업 활동들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가게를 열고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한 머물기 위한 청년들은 로컬 크리에이터로 변모해 나갔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모여 쌓이면서 독립서점, 마을 펍, 카페, 레스토랑, 편집숍 등의 창의적 공간들이 제민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도시재생, 청년마을 등 다양한 정부지원사업들과 함께 진행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높아진 지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의 부분도 존재한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정착과 활동을 유인하고 지원한 퍼즐랩의 역할과 함께 이들의 활동기반이 된 지역의 생태계 형성은 핵심적 부분임에 틀림없다.



제주시 해녀의 부엌



제주시에서 로컬콘텐츠로 주목받는 해녀의 부엌은 2020년 중기부의 지역가치창업가 선정, 2021년 문체부의 올해의 관광벤처로 선정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녀의 부엌은 제주 구좌읍에서 방치된 어판장을 공연장 및 식당으로 개조하여 제주 해녀의 삶을 주제로 하는 연극과 이들이 채취한 음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의 콘텐츠로 2019년 탄생하였다. 홈페이지의 사전예약으로 모집된 참여자들에게 연극관람과 해녀와의 대화 그리고 전통음식의 식사가 제공되는 실감형 콘텐츠와 소규모 코스요리를 제공하는 특화전략으로 인기를 끌며 제주에서 2호점까지 운영중에 있다. 2022년 현재 해녀의 부엌은 22명의 인력 중에서 11명은 지역인재이고 11명은 전국에서 온 예술가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인력 중 대부분은 현지 해녀이며 이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외부에 술가와 교류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생성하고 있다.

지역자산을 활용해 로컬푸드의 확산을 도모하고 대기업 및 해외지역과 협력을 통해 대중화와 사업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연극테라피스트를 꿈꾸던 대표의 지역자산의 창의적 활용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제주의 대표적 로컬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사례이다.

로컬창조활동을 위한 정책의 역할

정부는 지역사회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창조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창조적 활동 기반의 정책지원 전략은 지역 스스로 창의적 콘텐츠에 기반한 로컬브랜드의 형성을 주문하고 있다. 과거의 정형화된 인재양성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련단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방식으로는 도시보다 작은 공간적 차원에서 특색있는 문화자원 기반의 창조적 활동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사례에도 제시된 바처럼, 로컬창조활동 확산은 창의적 인재(Creative Class)들이 지역특색의 로컬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창의적인 시도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와 場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유효하다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청년과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주민과 활동 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자원에 대한 탐색과 발굴, 매력적이고 감성적인 스토리와 브랜드의 구축, 이에 대한 확산과 지역사회와 연계의 전략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실험의 場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로컬브랜딩 생활실험’ 지원과 같은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도 주목할 만 하다.

나가는 글

로컬창조활동의 핵심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연계에 있다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와 공간의 특성이 중요하다 하겠다. 일찍이 리처드 플로리다(2002)는 창조계급의 부상을 통해 이들이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구하는 것은 풍부한 양질의 경험과 다채로운 문화, 모든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창조적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의 인정받음을 플로리다는 강조한다(플로리다, 2005). 결국 로컬창조활동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분위기 와 함께 다양한 실험과 확산이 가능하고 경험과 활동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milieu)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지원의 방향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순환·장웅조, 2022, 가치기반 경제 속의 로컬크리에이터 연구, 문화경제연구, 25(1)
- 모종린, 2017, 골목길 자본론, 다산박스.
- 모종린, 2021,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도서출판 알키.
- 심진범·김지선, 2017,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동향 및 인천 지역 경험, 인천연구원.
- 이병민 외, 2022, 문화기반 중소도시 발전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고서.
- Florida Richard, 2002, The Rising the Creative Class, 이길태 역,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전자신문사.
- Florida Richard,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이원호 외 역,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열린 마당



태안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과 영화 태안

태안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과 영화 ‘태안’¹⁾

강희권 | 태안참여자치 시민연대 대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 상임이사)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된 후 7월 초부터 1951년 1월까지 태안지역 민간인 최소 1,185명이 학살되었다.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 보도연맹원과 부역혐의자 최소 1,049명이 학살되었고, 적대세력에 의해 최소 136명이 학살되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민간인희생자 유족들이 진실규명신청을 하기까지 학살사건 후 55년이 지났다. 특히 보도연맹과 부역혐의로 학살된 희생자 유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과 연좌제의 사슬에 갇혀 오랜 세월 감시와 차별로 피해를 당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 그것은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입도 닫고, 귀도 막고, 가만히 숨죽여 살아가라는 경고였다.

희생자가 최소 136명인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 유족들은 105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했지만, 희생자가 최소 1,049명이나 되는 보도연맹원 희생자 유족들과 부역혐의 희생자 유족들의 진실규명신청은 각각 3건과 5건에 불과하였던 것은 유족들이 갖고 있는 국가와 이웃에 대한 깊은 불신과 두려움 때문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월 태안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태안민간인 학살사건은 1950년 6월 말에서 7월 초에 발생한 보도연맹원 학살사건과 인민군 점령기 적대세력에 의한 학살사건, 같은 해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 발생한 부역혐의 학살사건으로 구분되었다.

보도연맹원 희생사건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3건이고 희생자는 4명이었다. 신청인들은 한국전쟁 개전 직후인 6월 말에서 7월 초 경찰에게 연행되어 태안 백화산에서 학살되거나 대전형무소로 이송되던 중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신청인 측 참고인들은 한국전쟁 개전 직후 태안면 백화산 사기실재에서 태안보도연맹원이 경찰에게 집단학살

1) 본 글은 태안유족회가 발간한 태안 민간인 학살백서를 참고해 작성함.

되었으며, 희생자 중 약 100명의 시신을 태안면 면사무소 앞에 이송해 놓았는데 불에 타 있었다고 하였다. 경찰 측 참고인들은 한국전쟁 개전 직후 태안경찰서가 후퇴하기 2~3일 전에 공문으로 내려온 충청남도 경찰국의 지시에 따라 태안경찰서 각 관할 지서에서 보도연맹원들을 체포, 경찰서로 이송하였고, 태안경찰서는 이들 중 일부는 대전형무소로 이송하였고 일부는 백화산 사기실재에서 학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05건이고 희생자는 104명이었다. 신청인 100여 명은 1950년 7월부터 10월 초까지 서산군 양대리 해안과 음암면 수석리 소탐산, 근흥면 용신리 해안, 소원면 신덕리 창고, 소원면 모항리 해변 등지에서 인민군, 내무서원, 분주소원, 자위대에 의해 집단학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부역혐의 희생사건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5건이고 희생자는 10명이었다. 신청인들은 수복 후 1950년 10월 중순경부터 부역혐의자들이 체포되어 지서와 태안경찰서 유치장, 각 읍면 양조장, 학교, 창고 등지에 구금되었다가 태안여고 터와 공동묘지, 근흥면 용신리 해안, 소원면 신덕리 해안 등지에서 경찰과 치안대에게 학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태안지역 부역혐의자 신청 건수와 진실규명 대상자 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가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월 사이 몇 차례에 걸쳐 근흥면, 태안읍, 소원면, 원북면 등지를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면마다 2~3곳의 학살 장소가 있었고, 각 장소마다 수십 명이 학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2008년 2월 서산경찰서를 방문하여 1980년에 서산경찰서가 생산한 '신원기록심사보고'를 열람하였다. 이곳에는 한국전쟁 당시 서산시와 태안군에서 군경에게 처형된 1,500여 명의 주민들의 신원이 목록형태로 기록되어 있었다. 사전조사와 '신원기록심사보고'를 통해 학살의 규모를 파악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서산시와 태안군에서 발생한 부역혐의 학살사건을 전부 조사하기로 하였다.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개전 초기 태안에서 학살된 국민보도연맹원 중 115명의 희생자 명단과 신원, 학살경위를 밝혔다. 그리고 인민군 점령기 7월 중순부터 10월 9일경까지 태안군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주민 중 136명의 희생자 명단과 신원, 학살경위를 밝혔다. 또한 수복 직후 부역혐의자로 학살된 주민 중 희생자로 확인된 626명을 포함해 총 857명의 부역혐의자의 희생경위와 신원을 밝혔다. 이후 태안유족회는 추가로 희생자를 확인하여 부역혐의 희생자 906명,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115명, 기타 희생자 28명, 총 1,049명이 희생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 중 태안군에서 최소 1,185명의 주민들이 집단학살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태안민간인학살의 첫 번째 특성은 학살이 대규모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특성은 상호 보복으로 각각의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성은 각 학살 사건마다 그 형태가 잔인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보

도연맹원 학살, 적대세력에 의한 학살, 부역혐의자 학살사건 모두에서 마찬가지로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하여 서로를 적대하고 대규모 학살사건이 발생하는 형태로 발전시켰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시 국가권력의 치안정책과 태안보도연맹원 학살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은 공산주의 적대라는 이념과 정책을 토대로 남한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시켜 권력의 안정을 보장받으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거나 혹은 동조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을 특정집단으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국민보도연맹원이라 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의 정책은 공산주의 적대라는 냉전 이념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편으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존재는 반대편이라는 진영논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태안경찰서가 보도연맹원 100여 명을 사기실재에서 총살하고, 시신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집단학살하고 후퇴하면서 태안민간인학살의 처참한 역사가 시작되었다.

영화 ‘태안’은 태안지역만의 한국전쟁민간인학살사건을 내용으로 제작했으며, 2004년부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현장을 촬영하고, 2014년 영화 ‘레드툼’과 2017년 영화 ‘해원’을 제작한 구자환 감독이 만든 영화이다.

학살터 확인과 유족증언 준비는 태안유족회 강희권 상임이사가 담당하고, 세월호 유족인 김영오 씨가 인터뷰어가 되어 약 7개월 동안 촬영하였다. 학살사건이 발생한 지 70여년이 지나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목격한 분들은 최소한 80대 후반의 연세이기에 살아계신 분이 많지 않고, 살아계셔도 당시의 상황을 영상에 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유족분들을 만나고 학살터를 찾아 70년전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비인간적인 집단학살의 생생한 증언을 충격과 혼란 속에 영상에 담았다. 영화 ‘태안’은 구자환 감독이 먼저 제작한 ‘레드툼’, ‘해원’과 함께 2021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여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는 지역언론사인 태안신문과 함께 영화 ‘태안’을 2021년과 2022년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태안 작은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태안군 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학생들의 감상문을 모아 ‘태안 그 후’라는 책자를 2회 발간했다.

현재 영화 ‘태안’은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다. 구자환 감독은 미니다큐를 준비 중이며 유족들이 증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영상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CMS후원도 받고 있고, 지역 촬영에 동행해 함께 취재에 나설 출연자도 모집하고 있다.

충남연구원 계간지 '열린충남'이 100호 발간을 맞았다. 1995년 창간호의 첫 장을 열어주신 심대평 전.도지사의 충남사랑을 이번 100호에 담아내면 더욱 뜻깊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원고를 요청드렸다. 언제나 가슴설레는 말이 4천만의 '충남'이라는 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편집자 주>





심 대 평 | 전 충남도지사



우리 충남 서산 출신의 작가 민태원 선생은 수필 '청춘예찬'에서 '청춘'을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이라고 표현했다. 필자에게도 이처럼 윙조리거나 듣기만 하여도 설레는 말이 있다. "충남"이 바로 그것이다.

아시다시피 필자는 관선과 민선을 포함 14년간 충남도지사로 재임한 바 있다. 단순히 오랫동안 재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고향 충남을 위해 열정을 다했고, 그만큼의 성취와 보람도 함께 일구었다는 자부심이 지금까지도 설렘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1995년부터 시작된 민선 1기에서부터 3기까지의 시간을 생각하면 더욱 그런 느낌이 크다. 아마도 민선 시대 개막이 준 선물일 것이다.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관선과 민선이 다를 수는 없지만, 도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점, 정해진 임기 동안 소신껏 정책을 펼쳐갈 수 있다는 점 등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고 샘솟는 의욕과 열정은 어디다 비길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중앙의 통제와 지시가 아닌 자율과 책임의 행정이 꽃피는 충남, 모든 국민이 부러워하고 살고 싶어 하는 충남을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정한 것이 "4천 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이었다.

이는 민선 3기까지 변하지 않은 충남도정의 비전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고 국가를 향한 충남 대도약의 선언이기도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전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 냄으로써 '충남'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떨림과 설렘으로 간직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크게 두 방향을 설정했다. 인본행정과 경영행정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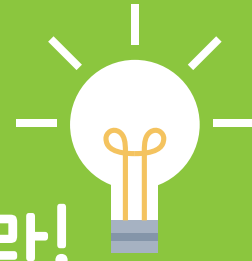
인본행정은 내적 성장을 위한 것으로 충남 정신 발양 운동을 통해 금지와 자부심을 고양시켜 나간 일, 도민의 날을 제정한 일, 전국 최초로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다각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한 일, 깨끗하고 푸른 충남을 제창한 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영행정은 외적 성장을 위한 것으로 전국체전의 종합우승을 일구어내고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일, 전통적인 농업도에서 첨단 산업도로 탈바꿈시킨 일, 외자유치와 수출증대, 농어가 소득의 획기적 증가 등을 이루어 낸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충남도에는 필자의 퇴임 이후 세 분의 지사님이 봉직하셨고 한 분이 현재 봉직 중이시다. 모두 확고한 비전을 세우고 이를 도정에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늘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충남도정은 자율과 책임의 민선자치시대를 선도하며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충남'이라는 이름은 늘 가슴을 설레게 하고 "4천 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새롭다.

반짝반짝 빛나는 생활 속 아이디어 모여라!



— 열린충남 100호 발간 기념 충남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

구성 및 정리 - 정봉희 | 충남연구원 출판홍보팀장
김소연 | 충남연구원 출판홍보팀 행정원



충남연구원 계간지 '열린충남'이 100호 발간을 맞았다. 기념이 될만한 이벤트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열린충남' 이미지에 맞게 도민 행복 아이디어 공모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응모된 총32편 가운데 최종 10편(열린상 5편, 충남상 5편)을 선정했다.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감 100%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정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본다.

〈편집자 주 / 게재 순서는 랜덤이며, 내용은 편집상 일부 수정될 수 있음〉

떠나요! 힐링도시, 느껴요! 행복충남 _ 김호진(천안시)

• 개요

- 지역 관광 홈페이지 내 음식점 정보 표시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입식테이블) 유무 표시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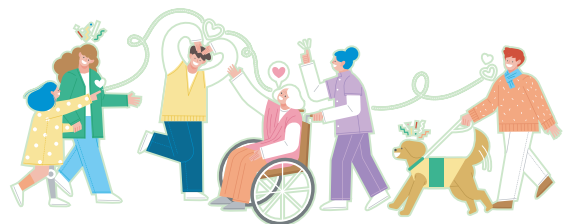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관광을 위해 지역을 방문할 경우, 대체적으로 비장애인 위주의 관광 편의시설 정보가 주로 홍보되어 있어, 다소 난감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됨.
- 만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식사하기 위해 관광지 내 음식점을 방문하여도 음식점 내 식탁이 휠체어의 높이에 맞는 식탁으로 준비되어있는지 궁금할 것임.
- 그 이유는 방으로만 되어 있는 음식점인지 음식점 내 일반식탁 의자에 옮겨 앉아야 하는지 장애인이 사전에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 개선방안

- 지역 관광 홈페이지 내 음식점에 휠체어 높이와 맞는 식탁이 마련되어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 표시

• 기대효과

-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음식점 방문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음.



반려동물 친환경 간식 재배용 주말농장 운영 _ 설동준(천안시)

바로 충남의 농가 활성화를 위한 주말 농장과 현재 활성화 중인 반려동물 산업을 연결시킬 “반려동물 친환경 간식 재배용 주말 농장 운영”에 관한 아이디어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유기농 수제 간식을 제공하고 싶은 전국의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니즈를 맞추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충남 시군의 많은 농지들을 체험농장으로 만들고 전국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관광 후 체험농장까지 경험하고 생산된 수확물을 반려동물용으로 건조시켜 집으로 배송시키는 것이 주된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주말농장의 관리와 건조 위탁 회사의 근무자들은 지역민분들을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충남 15개 시군 이·통장을 ‘생명지킴이’로 임명·활용 _ 김정식(계룡시)

지난해 충청남도가 자살률 1위 불명예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도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자살자수는 679명으로 많습니다. 충청남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바로 충남 15개 시군 이·통장을 ‘생명지킴이’로 임명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 이·통장님은 본인이 사는 지역주민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친근감이 있어 소통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독거노인 고독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생명지킴이의 작은 역할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 생명지킴이 :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기관, 전문가)에 인계하는 사람

- 생명지킴이 교육은 지역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면 문제없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 생명지킴이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충남을 향하여 _ 이의성(충청북도)

• 제안내용: '니트족(구직단념자)' 장기화예방 패키지 지원

• 추진배경

- 취업포기자 '니트족'의 급증, 전년대비 24% 증가
- 국내 '니트족'의 장기화 예방 시급

• 제안내용

- (경험지원) 취업 포트폴리오 발굴 및 공유: 면접경험, 교육경험, 사회생활 경험 등
- (공간지원) 구직활동 공간지원: 소속감 제고를 위한 물리적 공간지원(비용: 무료)
- (역량지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이력서, 면접, 진로설정, 심리상담 등 취업 종합컨설팅 지원
- (지원금 지원) 지역화폐 및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구직활동 횟수에 따른 차등 지급

• 기대효과

- (취업을 제고) 청년층 및 니트족 취업을 제고
- (잠재적 인재 발굴) 잠재적 유망인재 발굴
- (지원사업 활성화) 교육·취업 등 관련 정부사업 활성화
- (니트족 장기화 방지) 니트족 사회문제 해결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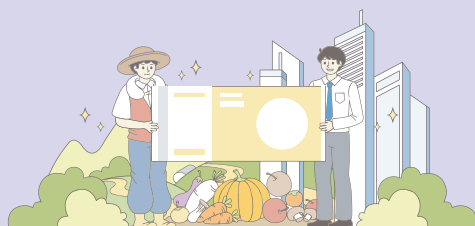


충남 각 시·군의 지역화폐를 충청남도 전역에서 통용되는 서비스 _ 이재혁(전라북도)

제가 제안하는 공모내용은 “충남 각 시·군의 지역화폐를 충청남도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충청남도는 비교적 최근 시·군 단위로 운영 중인 지역화폐 플랫폼을 하나의 앱에서 선택적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플랫폼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개선에 추가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의 각 시·군은 각자 고유의 지역화폐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 내이므로 각 시·군 간에 서로 거리가 가까운 데다가 특히 관광객 입장에서 지역화폐를 각 도시에서만 사용하기엔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소재의 각 시·군에서 쓰이는 고유의 지역화폐를 충청남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지역화폐 범용성이 커질 수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인재활용회수기 설치 _ 임슬기(서울특별시)

제가 생각한 행복 아이디어는 무인재활용회수기 설치입니다.

해외에서만 보던 재활용회수기(수퍼빈, 네프론)를 최근 한국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알고 있는 도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거치 장소가 많지 않고,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집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해당 장소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해당 기계는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처럼 일정 세대 이상의 거주 단지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경기장,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영화관, 지하철 등)에 기계 설치를 필수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페트병, 캔뿐만 아니라 재활용 품목도 늘어나길 바랍니다.



내포신도시, 도민의 문화 및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한 ‘스타필드’ 유치 전략 _ 이준형(충성군)

현재 내포혁신도시 주변에 정주여건 및 문화, 여가 요소가 적어 주말에 인구 유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유입 또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유입 및 주말 유동성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신세계그룹 스타필드 유치’를 제안합니다.

먼저 충남도(대전포함) 내 신세계백화점(대전, 천안), 갤러리아(대전, 천안)가 있으나 현대백화점과 스타필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중 하나가 내포혁신도시에 유치된다면 대전, 세종, 천안뿐 아니라 태안, 서산, 당진, 보령 등 충남도 내 모든 시·군에서 1시간 내 거리에 위치하기에 200만 도민 접근성이 용이하며, 백화점의 매출 또한 타 광역시 못지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 ‘스타필드’는 자동차와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가생활이 컨셉입니다. 이는 부지가 많고 1가구당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충남도에 가장 적합한 복합 쇼핑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장래역사 부지 옆(서쪽)에 ‘스타필드’ 부지를 무상 50년임대료 신세계그룹에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이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를 발생시켜 내포혁신도시 활성화 및 도내 소비경제 활성화를 통해 내포 지역이 충남도 경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임대 수익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도민 소비 경제 및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내포혁신도시에 급진적인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행복센터(면사무소)에 지역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설치 _ 조수아(충청남도)

저는 서울에서 충남으로 전입한 지 4년차 되는 청년입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즐기던 삶을 살다가 충남살이에 적응기간이 필요했는데요. 충남은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 사업이 많고 그 대상으로 참여할 기회가 많은 곳입니다.

다만, 충남에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군청 등에서 하는 제도도 사실상 홈페이지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지역카페를 통해 관련 정보를 듣긴 하나 부분적입니다. 담당 공무원 또한 지역카페에 글 올리는 게 필수적인 업무는 아니니까요.

주민행복센터(면사무소) 앞에 군단위 말고 면단위로 지역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각종 공익적인 정보를 포함한 지역민들 소식도 포함해서요. 지방은 보통 현수막으로 하더라고요. 지역 신문도 있기는 하나 요새는 연세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니 디스플레이를 보시는 게 낫설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 지역주민 건의사항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은 주로 이장님을 통해서 정보를 얻던데 그렇다 보니 지방에 새로 이사 온 분들은 기존 네트워크에 녹아들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앞에 동네 소식을 전하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한다면 센터 앞에 주민들이 모여들고 교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및 임산부를 위한 지원제도 및 시내버스 활성화 _ 여지윤(계룡시)

현재 아이를 낳고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주부로서, 조금이나마 젊은 층이 계룡에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혼부부 및 임산부들을 위한 제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육아휴직 지원비 지원 등 다채로운 제도들을 내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의 차이도, 도시의 크기도 다르지만 비슷한 제도들이 만들어진다면 계룡시 거주하는 젊은 시민으로서 훨씬 더 삶의 질이 상승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직까지 계룡시내를 돌아다니는 버스가 생각보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바깥을 나가려면 차량이 무조건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차량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한 번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다음 버스가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보부모 멘토스쿨 운영 _ 김후남(충청남도)

• 개요

- 예비부모와 임신부 모두에게 실질적인 육아 노하우, 육아 관련 지식들을 전수하는 초보부모 멘토스쿨을 만들어야 함.
- 초보부모 멘토스쿨이란 아기를 한둘만 낳는 요즘 시대의 엄마와 아빠들은 모두가 초보부모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초보엄마와 신혼부부들을 위해 임신, 태교, 육아에 관한 지식들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전문가들을 멘토로 초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교(교실)임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임신, 태교, 육아 등의 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정보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 초보부모 멘토스쿨의 강사진은 산부인과 의사, 아동심리학 교수, 육아전문가, 유아식이유식 요리전문가, 아동상담전문가, 아동방꾸미기 인테리어전문가 등을 강사진으로 초빙하여 순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함
- 시행 장소는 충남지역 시(군)의 시내 복지센터, 여성회관, 주민센터 등을 이용하여 실행 가능함

〈예시〉

※ 예비부모, 임신부 대상 '초보부모 멘토스쿨' 운영 ※

- 운영 : 3기수 운영(기수당 2개월 과정)
- 기간 : 2023년 4월~10월 매주 월요일 14:00~16:00
- 방법 : 육아노하우가 있는 육아 관련 전문가 초빙 멘토 운영

• 기대효과

- 교육과 체험으로 육아 관련 정보 공유 등



언론이 바라본 충남



MZ세대 청년농업인 정착의 조건

MZ세대 청년농업인 정착의 조건

이찬선 |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 부국장

미래의 농업·농촌은 MZ세대 하기에 달려 있다. 도시 청년들이 농촌으로 향한다. 도시주택 가격 상승,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살아남는 도시생활의 척박함 때문이다. 2021년 한해 37만 가구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국민들의 34.4%는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귀농귀촌, 귀어를 희망하는 이들의 주축은 청년이다. 지자체들은 저마다 청년농업인 환영 현수막을 내건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 수단으로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손짓한다.

충남도는 귀농·귀촌 유도를 위해 서산 간척지에 2025년까지 436억 원을 들여 대규모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촌의 인구절벽을 극복하려는 의미심장한 시도다. 초기 투자 비용과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영농단지 입주 청년 농업인에게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도 마련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와 보금자리로만으로 MZ농업인들은 꿈을 펼칠 수 있을까. MZ세대 농부라는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농촌은 험지가 될지 모를 일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MZ세대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무장하고페이결제로 온라인 구매 비중의 50%를 넘는 소비의 주축들이다. 미래보다는 현실에 충실하고 개인의 행복을 중시한다.

MZ농부들은 '반농반X'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농삿일을 천직으로만 강요하는 건 농촌을 게토화할 뿐이다. 청년 농업인들은 농사로만 생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병행하려 한다. 충남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농부의 67.8%는 '농사와 다른 일을 함께' 하고 싶어한다. '반농반X'적 태도가 뚜렷하다. 반은 농사를 지으면서 반은 전공을 살려 도서관 사서로 일한다든지, 작은 텃밭을 일구면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로 잼, 쿠키를 만들어 오일장에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농사를 지으면서 예술활동이나 도서관 사서를 마다하지 않는다. 농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직업관을 추구한다. 안정적인 수입을 보다는 여러 경로의 수익 창출도 마다하지 않는다.

꼭신한 비빌언덕이 있어야 한다. 청년들이 농업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주거문제나 생활고를 피할 우산이 필요하다. 홍성의 젊은협업농장은 비빌언덕과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효능감 있는 모델이다. 홍성 젊은협업농장은 귀농 청년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농장이 운영되고 공동출자·공동분배 원칙이다. 새로 귀농한 사람들이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농장에서 일하면서 농업 기술을 배우는 인턴십 제도도 운영된다. 그런 면에서 충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영농단지에는 신종 비빌언덕이다. 토지, 영농기술, 주거 제공은 청년들에게 실패의 두려움을 줄여줄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MZ농업인을 위한 문화울타리가 더해져야 한다.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은 이들의 정착의 자부심을 높이는 주체적 삶과도 직결돼 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도 넓혀야 한다. 청년들은 반농반X의 삶을 실현할 농촌을 머릿속에 그린다. 더 이상 Z세대 농부들에게 X, Y세대로 재촉하여 절간생활을 강요할 수는 없다. 생계형 청년 농부 육성정책만으론 미래농업을 장담하기 어렵다. MZ농업인을 위한 문화울타리가 필요하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그리고 충남연구원의 과제

명형남, 김형철¹⁾, 강마야, 최윤정²⁾ |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은
왜 실시하였고
어떤 뜻을 가지는가?

2022년 11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2022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은 충남연구원 고충상담위원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주는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한 교육이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목적은 “공공기관 폭력예방 방지조치(성희롱·성폭력)에 따른 고충상담원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상담원 실무 역량 강화 및 공공기관 폭력 예방 업무의 실효성 확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 기술 훈련으로 기관 내 고충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증진”이다.

이번 교육에 충남연구원 고충상담위원 2명이 직접 교육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발판으로써 많은 의미가 있었다. 한 조직 내에서 고충을 당할 수 있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고충을 들어주는 상담원 입장에서, 한 가족 내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등 여러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게 되었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진행방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비대면 교육(ZOOM 활용)으로 기수별 교육인원에 제한을 두어 2일 동안 14시간 진행되었다.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내용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사례를 통한 토론 방식을 지향하였고 공공기관 고충상담위원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성희롱 성폭력 강의를 진행하였다. 비대면 교육이었지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교육이었다. 교육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고).

1) 충남연구원 고충상담위원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 제44조의 2에 의거, 2명의 공충상담원을 위촉하여 운영중)

2)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장 및 연구원

[그림 1] 2022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전문과정 프로그램(14H)

교육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상황 법적 인지 및 사례분석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역할실습을 통한 실무력 증진			사전 사이버학습(100%이수)
교육계획	1일차	◇ 교육 안내 및 워밍업 활동	시간	조직 내 성희롱 문제 파악하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I	120분	2차 피해 알아보고, 예방하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II	60분	성희롱·성폭력 인지 및 접수 처리하기
		피해자 관점의 판례와 결정례	120분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하기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120분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시작하기
	2일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단계별 가이드 I	120분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과 이해하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단계별 가이드 II •역할실습 및 사례토론 중심	180분	성희롱·성폭력 사건 종결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기
		◇ 교육 마무리		

자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2.08.), 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운영안내(10월~11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이번【2022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과정】의 핵심내용은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직장 내 처리절차, 주체별 책무를 강조하고 제시한 것이다.

첫째,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등(피해자, 신고인, 조력자)이 1차 피해 이후 문제 제기 및 사건처리 과정과 이후 조직 내외에서 또 다른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용상, 업무상 입는 피해를 말한다.

둘째, 2차 피해에 대한 법적근거로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현재 유일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 제3조에 2차 피해 정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 ◆ 사용자로부터 폭력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신분상 조치, 인사조치 등)

셋째, 2차 피해 유형은 현행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규정된 법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❶ 피해자임을 이유로 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또는 피해자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 ❷ 피해자의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 및 필요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사건은폐, 방치, 축소, 지체, 피해자 보호 조치 미실시)
- ❸ 피해자 등에 대하여 조사 및 처리 과정이나 조직 생활에 있어 재차 성희롱적 언동을 하거나 의심, 비난, 따돌림, 폭언,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❹ 비밀누설
- ❺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넷째, 2차 피해 사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표 1] 참고). 2차 피해 사건 처리 절차는 1차 행위에 대한 사건처리절차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의 경우 1차 사건에 대한 행위자 조치와 마찬가지로 규범적이며 엄정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

[표 1]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사건 처리절차

처리단계	주요요소
신고 및 접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구의 접근성 및 안전성(익명성, 비밀유지) •창구 담당자의 전문성 및 태도 •후 즉시 분리조치
조사심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 징계 담당자/위원의 전문성 및 태도 •전문가의 참여 •엄정한 처리 •보호 조치(행위자와의 '실질적' 분리) •피해자 지원 기관/단체의 조력 •적정 징계 및 징계 사실 사내 공지
후속조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위자 측근과의 '실질적 분리' •문제 해결 의지 •피해 유발자 징계 •피해자 지원 기관/단체의 조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자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교육 전문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다섯째, 조직 내 2차 피해 예방 및 주체별 대응 책무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표 2] 참고).

[표 2]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위한 주체별 대응 책무

구분	주요 내용
기관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 •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 등
고충처리업무담당자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피해자가 요청한 2차 피해방지조치 이행 점검 •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개인정보 비밀유지 등
상급자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상급자에게 가장 먼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고 이때 상급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하느냐 여부 결정
구성원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구성원들은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고, 조직에 해가 되며,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움. • 이러한 생각은 문제를 일으킨 자가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자,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허위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행위 등을 야기 가능하기에 미연에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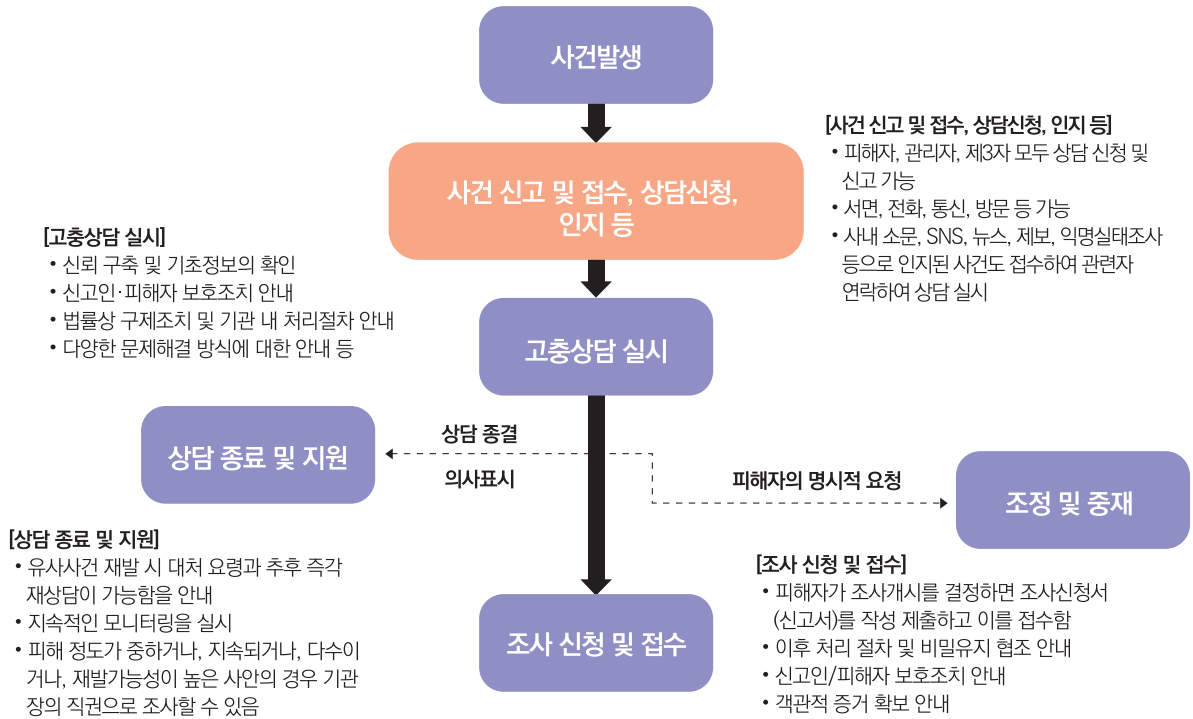
자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교육 전문과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충남연구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충남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2018년 기준)】은 시행 초기라서 접수 면담 추진 체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서식 등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후 사회적 환경변화 인하여 여러 개정사항이 발생하였고 관련 부처의 지침 등을 반영하여 현재 【충남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사항에는 ■ 2차 피해의 개념 및 예방, ■ 고충상담원의 역할 및 주요업무,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 기관장, 고충처리 업무담당자, 상급자, 구성원의 책무 등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그림 2) 참고).

[그림 2] 충남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매뉴얼(안)



주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2022)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교육 전문과정(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세부내용)자료를 인용하여 충남연구원만의 매뉴얼로 각색함.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이 충남연구원에게 내준 과제는?

충남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처리지침 개정은 필요하다. 이번 교육을 통한 생각해 본 충남연구원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시스템 보완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새로 개정된 지침은 기관장의 책무,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통보 및 신고의무,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징계의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예방관리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지침의 적용대상자를 기관장을 포함한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적용범위에 넣었다. 또한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단지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 피해자를 도운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마련 역시 새로 개정되었고, 2차 피해를 준 경

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조사 중인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원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의 경우에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개정되었다.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서는 사건을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 피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 범위를 규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비밀유지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정보가 노출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개정한 지침을 기초로 충남연구원 지침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고, 개정된 사항을 연구원 전체 구성원들에게 알려서 강화된 사항을 인지하도록 홍보·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위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은 신고인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실 개선 및 고충상담창구 다각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충남연구원 내부에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없다고 안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러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성희롱·성폭력 익명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고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을 통해 진단결과를 분석하고 이와 연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발굴, 제시하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성희롱·성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재발방지조치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재발방지조치를 위해 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되었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행동규범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넷째, 여성가족부 등에서 현재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수행된 교육은 어느 정도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은 실제로 발생한 판단하기 애매하고 어려운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걸음 깊게 들어가서 진행된 교육이었다. 여러 각도의 입장에서 숙고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우리 연구원, 아니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심화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특별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예방차원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참고문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2.08.), 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운영안내(10월~11월).
- 여성가족부 2022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운영(10월~11월),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영희(2022.0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직역량교육센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교육 전문과정,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
- 박선영·민대숙·박보람·고현승(2023.01.),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여성가족부.



연구원 소식



충남연구원, “농촌현실 반영한 경관보전직불제로 개선해야”

충남연구원,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 이전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필요”

베이벨리 메가시티 ‘마스터플랜’ 그린다

충남연구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물품 지원 및 성금 전달

연구원 소식 01 ▶▶▶▶

충남연구원, “농촌현실 반영한 경관보전직불제로 개선해야”

- 단일경관에서 복합경관으로 직불금 대상 확대 제안

두렁에 꽃무릇을 식재하면서 마을 축제까지 이끌어낸 충남 홍성의 ‘소새울마을’. 2016년 마을주민들은 두렁에 꽃무릇을 식재한 이후, 2021년에는 꽃무릇을 주제로 마을축제가 개최하기에 이른다.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으나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은 없었으며, 특히 ‘경관작물 재배·관리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경관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지속적인 농촌경관 제공에 한계를 드러냈다.

충남연구원은 농촌지역 경관을 형성하고 유지·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경관보전직접직불제’(이하 ‘직불제’)의 대상을 홍성 소새울마을처럼 실제 농업·농촌경관의 다양한 복합적 연계성을 고려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농촌경관은 논, 밭, 두렁, 둠벙, 하천 등 매우 다양한 자연요소가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성되어 있는 경관복합체이기 때문이다.

충남연구원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지난 2월 CNI정책현장 보고서에서 “직불제 지급 대상자는 농지 및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인데, 대부분 대규모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관리’로 한정해 지급하고 있어서 실제 농업·농촌경관을 구성·유지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복합적 연계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농업·농촌경관 구성요소들을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할 경우, 개별공간으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상호간 생태적 연계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경관작물 재배·관리 농지라는 단일경관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농업활동과 농촌경관이 상호작용하는 복합경관으로 직불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공 책임연구원은 “소새울마을 사례처럼 직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충남형 농업·농촌경관복합체’의 정의가 필요하고, 직불제 요청을 위한 우수 농업·농촌경관복합체 선정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농업·농촌경관을 구성하는 개별경관에 대해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이상의 가치로 평가된 농업·농촌경관복합체에 대해 도 차원에서의 관리 및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개별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직불제 대상 선정 개선 방향을 중앙정부에 역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새울마을(위)과 축제 홍보자료(아래)

출처 : 홍성군 홈페이지



홍성군 홍성읍 꽃무릇 축제 현장

두렁의 꽃무릇(좌), 논로의 신비의 문(우), 연꽃재배지(아래)

충남연구원,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 이전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 필요”

– 충남도 자연취락지구 내 공장 31개소, 축사 27개소 우선 대상지로 제안

충남도내 농촌마을에 무분별하게 입지되어 있는 공장 등 위해시설의 이전 및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공장 소음·분진, 축사(*돈사와 계사로 한정) 악취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이샘 책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충청남도 농촌공간 정비대상 분석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지도를 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핵심은 농촌마을에 혼재된 유해공장을 주변 농공단지 등으로 이전 배치하고, 축사를 정비하거나 축산지구로 집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충남도내 농촌공간 정비대상 현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공장으로부터 500미터 대기질 영향권에 있는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96,167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도내 자연취락지구(*국토계획법에 따라 20~30가구 이상 마을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 충남도 전체 553개) 내 공장 31개소(5.6%)를 정비 우선대상지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천안시가 8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산시(5개소), 당진시(2개소), 금산군(2개소), 공주시(1개소) 등의 순이다.

다음으로 축사로부터 500미터 악취 영향권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는 총 32,876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연취락지구 내 축사 27개소(4.9%)를 정비 우선대상지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산시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논산시(5개소), 홍성군(3개소), 공주시(3개소), 부여군(1개소) 등이다.

이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특성을 고려한 농촌공간정비 및 농촌재생 프로젝트 등의 도입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 충남도는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공장, 환경민원 축사들의 이전 및 집적화 대상을 발굴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악취·유해물질이 없는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을 추진중인데, 지난해 충남도에서는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이 마을의 축사를 이전 배치하는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25억 원 등 총 479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연구원 소식 03 ▷▷▶▷

베이밸리 메가시티 '마스터플랜' 그린다

충남도가 민선8기 '1호 과제'로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 그리기 작업에 돌입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2월 16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4차산업 핵심지역 육성을 위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민&관 합동 추진단 김영석 공동단장(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단원,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워크숍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방향 공유, 청사진 및 신규 사업 발굴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베이 밸리 메가시티는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방향은 △아산만권 대한민국 경제 발전 거점 육성 △국가 발전 및 지역 상생발전 기틀 마련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유도 등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아산만(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신설 △충남&경기 연접지역 대규모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당진평택국제항 물류 환경 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충남경제자유구역청 복원과 민관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또 △안산 대부도~보령 해저터널 간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

성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 △충남 서북부권 용수 확보방안 마련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도 세부 사업에 포함했다.

도는 지난해 7월 1일 김태흠 지사가 '1호 결재'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선택한 이후, △경기도와 협약 체결 △장&차관 출신 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경기도와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아산만권 지역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충남&경기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검토 작업을 편다.

이와 함께 △인접 지역 간 상생협력 사례 조사 △아산만권 민&관 의견 조사를 거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을 도출하고 △부문별 발전 전략과 개발 사업을 구상한다.

이날 워크숍에서 민&관 합동 추진단은 연구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받고 과업 범위와 내용 등을 살폈다. 이어 베이밸리 메가시티 청사진과 신규 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 논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충남과 경기를 넘어 세계적인 범위로 시야를 넓혀 산업 분야&영역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도는 앞으로 민&관 합동 추진단 분과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뒤, 11월 베이밸리 메가시티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김영석 공동단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미래 먹거리 창

출뿐만 아니라 국가 재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힘을 합해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도 모델로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204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성과 현대, 엘지(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반도체와 미래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은 민간인 30명과 도 공무원 14명으로 구성했다.

공동단장은 김영석 전 장관과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맡고, 단원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와 도의회 의원이 참여 중이다.

민&관 합동 추진단은 기획지원, 산업경제, 국토해양,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눠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추진 △아산만권 발전방향과 사업 추진 지원 △미래사업 발굴 △정부&국회&지자체&관계기관 등 대외협력 등의 활동을 편다.

자문위원회는 △추진 방향 자문 △사업 추진 및 정부 정책 반영 전략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으로는 건설교통, 산업경제, 환경, 해양수산 등 분야별로 실제 정부 정책을 입안·시행했던 정부 각 부처 고위직 공무원 출신 등 9명이 참여했다.



연구원 소식 04 ▷▷▷▶

충남연구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물품 지원 및 성금 전달

충남연구원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품과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연구원은 지난 2월 17일 연구원에서 유동훈 원장,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호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구호물품은 연구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옷과 생필품 등 20여kg에 해당한다.

유동훈 원장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구호물품 지원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연구원 원우회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성금 1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연구원 발간물 ▶▶▶

CNI
정책현장



복합경관으로서의 농업·농촌 경관보전직불 대상 확대 필요
사공정희 책임연구원



시민주도형 보행안전정책 현장모델
김원철 연구위원, 김윤식 연구원

인포
그래픽



충남도민에게 물었다
“고향사랑기부제 함께 하시겠어요?”
전지훈 초빙책임연구원



‘지역활력타운’으로 매력적인 정주공간을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에 당당히 맞서자
임준홍 선임연구위원, 최정현 연구원

정책
지도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분포
강마야 연구위원, 최돈정 책임연구원, 손성규 연구원



충청남도 농촌공간 정비대상 분석 및 과제
오용준 선임연구위원, 이선 책임연구원, 전병윤 행정원



QR코드를 스캔하면 YouTube채널로 연결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CNI 정책연구 플랫폼 채널로 연결됩니다.

열린충남

THE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http://www.cni.re.kr>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실천”
본 인쇄물은 재활용 가능한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